
지역간 상생발전이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

일시 : 2013년 1월 30일(수) 14:00~17: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주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행사일정

시 간		진 행 순 서	
13:30 ~ 14:00	30분	□ 등록 및 안내	
		□ 개회식	
14:00~14:05	5분	개회 및 내빈소개	이원빈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14:05~14:10	5분	인사말	홍 철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14:10 ~ 14:15	5분	경과보고	이원섭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 주제발표	
14:15 ~ 14:45	30분	발표① : 김정호 교수 (KDI, 前 강원발전연구원장)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	
14:45~15:15	30분	발표② :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	
15:15~15:45	30분	발표③ : 이정식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	
15:45~16:00	25분	□ 중간휴식	
		□ 종합토론	
16:00~17:00	60분	토론사회	장명수 명예교수 (전북대)
		지정토론	김의섭 교수 (한남대)
			박시현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갑 교수 (동의대)
			손균근 부장 (국제신문)
			염돈민 센터장 (강원발전연구원)
			이상대 부장 (경기개발연구원)
			이재훈 교수 (영남대)
			장성수 교수 (제주대)
			조상필 실장 (전남발전연구원)
			황희연 교수 (충북대)

발표①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김정호 교수 (KDI, 前 강원발전연구원장)

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2013. 1. 30

김 정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 례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II.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III. 지역발전의 미래상

IV.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농어촌 활성화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대한민국: 영광과 도전

-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압축성장”**
 - ◆ 1962년 경제개발에 착수한지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
- **경제적인 부와 함께 “민주화” 달성**
 - ◆ 국제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로 인정, 개도국이 벤치 마킹하고 자 하는 첫 번째 대상 국가
- **향후 도전 : “4대 갈등 · 양극화” 해소와 30-50클럽 가입**
 - ◆ 압축성장과정으로 빚어진 계층간 격차, 세대간 격차, 대. 중소기업간 격차, 수도권-지방 간 격차 등 4대 양극화 ·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
 - ◆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인구 5천만명-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해야
 -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 IMF는 2016년 30-50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2. 지역의 현주소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취약한 지방경제**
 - ◆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지방 주요 도시들이 '지역중심지'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는 지방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 참여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해왔으나 수도권-지방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
- **강력한 중앙권력과 지방의 영향력 약화**
 - ◆ 지방자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은 여전하며, 재정분권 없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불가능
- **지역간 삶의 질 격차와 일자리의 불균형**
 - ◆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교육, 의료 등 복지, 문화예술 및 안전 분야에서 크게 열악
 - ◆ 구직자가 선호하는 우량 기업과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
- **지역 상생발전의 미흡**
 - ◆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 심화
 - ◆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5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3. 지역정책의 추이

- **참여정부 이전**
 - ◆ 개발연대(1960-80년대) : 압축성장을 위해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성장 전략을 구사,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
 - ◆ 민주화, 세계화 시대(1990년대 이후) : 지방의 개발욕구의 폭증으로 권한 및 자원배분, 개발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갈등 극심
- **참여정부 : 과감한 균형발전정책 수립, 집행**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특별회계 등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 그러나,
 - ◆ 개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경제적 비효율 야기
- **이명박 정부 : 광역적 성장기반 구축**
 - ◆ 규모경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 시도를 묶어 5+2광역경제권을 설정하여, 광역단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려 노력. 그러나,
 - ◆ 광역경제권의 실체가 모호하고, 광역정책 추진기제가 작동되지 않으며, 인위적인 권역설정으로 지역간 협력과 '광역화 시너지'를 얻는데 실패

6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1. 반성과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반성과 비판

- ◆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 중앙정부 시각에서 지역정책 결정
- ◆ 관 주도 정책추진 :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추진, 부작용 발생
- ◆ 정책공간단위 : 광역적 접근이 시기상조라는 비판 제기
- ◆ 이론과 현실의 간극 : 이론적이고 추상적(3차원 전략)

●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 현실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정책
- ◆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역정책
- ◆ 지역 니즈에 충실한 지역정책
- ◆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통합에 기여하는 지역정책
- ◆ 지역정책의 주 대상은 주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우선순위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2. 정책 내용과 참여 주체의 기능

● 정책내용

- ◆ 성장동력 발굴,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인구 특히 젊은 층과 지역 인재의 지역 이탈을 적극 억제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정주공간의 정비,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도시경쟁력 제고
- ◆ 공공복지서비스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민생안전 확립
- ◆ 지역간 연계협력과 상생발전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며, 이를 지역통합의 수단으로 승화 발전
- ◆ 지역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권 확대

●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할

- ◆ 중앙정부: Enabler 와 Facilitator
- ◆ 광역자치단체: Facilitator
- ◆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

9



Ⅲ. 지역발전의 미래상

1.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

● 목표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
-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청년, 장년, 노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 ◆ 도시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력 강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와 우량 기업 유치
- ◆ 지역간 상생발전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이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발전함으로써 국민통합 선도

11

Ⅲ. 지역발전의 미래상

2.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경제권’ 구축

● 구축의 필요성

- ◆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경제권을 글로벌 광역경제권(MCR)으로 육성
- ◆ 중부경제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

- ◆ 기본 방향
 - 3+1 한반도경제권 : 우선 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제주경제권의 2+1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 장기적으로 북한을 북부경제권으로 하는 3+1 한반도경제권 구축 추진
- ◆ 권역별 발전방향
 - 중부경제권 : 세계 속의 MCR
 - 남부경제권 : 동북아 속의 지역거점
 - 제주경제권 : 동북아의 해양관광거점
 - 북부경제권 : 통일 대한민국의 북부개발거점



12



IV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1. 지역 일자리 창출

1) 왜 지역 일자리가 중요한가?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계속

- ◆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인구억제 및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
- ◆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 유출
 - ※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률이 50%를 상회하고, 수도권 고교 출신 중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85%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

● 지역에 사람을 붙잡아 두려면 좋은 일자리 필요

- ◆ 비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 ※ 2008~11년 간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20만개의 일자리 중 25%인 5만개 만이 비수도권에서 발생
- ◆ 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인재를 '흡인'하고 있음
 - ※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상용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15

1. 지역 일자리 창출

2) 그 동안 지역정책은 일자리보다는 산업육성에 치중

● 미래성장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현재 일자리 만들기에 소홀

- ◆ 특정 선도산업 중심의 targeting 전략은 저성장, 융복합 등으로 각인되는 '뉴노멀 시대(New Normal)'에는 그 정책효과가 미흡
- ◆ 특히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기존 기업이나 산업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음

● 선도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일자리와 인력 모두 부족: 인력 수준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

- ◆ 선도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 대기업이어서 지역인력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 발생

● 일부 선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산학협력 저조

- ◆ 대다수의 지역 기업이 산학협력에서 소외되고 있는 반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일부 기업은 중복, 또는 연속적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대상기업의 확대발굴 필요

● 지역산업 지원기관이 너무 많고 추진체계 복잡

- ◆ 지역산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취약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

- 신산업 육성은 국가성장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
 - ◆ '내일의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는 장기적,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부주도로 추진
- 지역 일자리정책은 기업육성을 통해 실현
 - ◆ 지역 일자리정책은 '산업육성' 보다는 실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핵심
 - ◆ 특히 대기업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중소기업을 잘 이해하는 지방중기청이 지역 일자리정책 총괄
 - ◆ 지방노동청 : 노동자 보호에 치중,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 ◆ 지식경제부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
 - ◆ 지방자치단체 : 정치적 영향과 갈등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
 - ◆ 지방중기청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이 풍부; 따라서 지역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17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확대
 - ◆ 현재 미래성장산업육성 중심의 광특회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지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재편
 -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애로기술, 경영, 마케팅,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 복지확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수단 개발
 - 집적화 및 연계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 허용, 임대형·아파트형 공장 공급 등
- 애로기술, 뿌리기술 등 중소기업 R&D에 특화된 전문기관 역할 확대
 - ◆ 중소기업 전용R&D지원, 산학공동연구 등과 같은 연구개발역량 강화
 - ◆ 애로기술 해소, 생산기반기술개발 등에 R&D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금형 등 '뿌리산업' 육성
 - ◆ 생산기반기술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

18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지역별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
 - ◆ 지역의 현재 여건과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화산업과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 육성
- 도시형 산업과 연관 기업을 육성, 저소득층 및 여성의 일자리 확대
 - ◆ 도시형 산업 및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및 여성 일자리 확대: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형 산업을 위한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시설 공급
- 지역고용협약 제도의 도입
 - ◆ 지방중기청, 노동청,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기업, 노동조합,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목표와 목표달성전략 수립, 추진
- 지방중소기업 종사자 지원
 - ◆ 지방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인건비의 추가 부담 없이 직원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9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② 대학중심 산학협력에서 기업중심 “산학융합” 으로 전환

- 지역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인력의 지속적 배출
 - ◆ 지역밀착도가 높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현장교육실습 지원 강화
 - ◆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의 '마이스터 대학' 전환, 고급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
 - ◆ 공과대학에서 1~2학년 과정은 학과목 중심으로, 3~4학년에는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Co-op 과정) 개발
- 대학을 기업지원의 전진기지로 활용
 - ◆ 부처별로 분산된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규모 확대
 -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창조캠퍼스, HRD 사업(노동부)사업 등을 교과부의 LINC사업의 틀 내에서 '지역발전인력양성제도'로 통합
 - ◆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신기술기업의 집적화 도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에 창업자,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를 위한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incubator)의 확대

20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 ◆ '생산기지'의 이미지가 강한 산업단지를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스마트화, 녹색화 지원
 - 부처별로 추진되는 QWL사업과 산업단지 재생,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 거점 산업단지와 주변 산업단지간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고,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대·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공동 교육훈련사업 등 추진
- 국내 U-Turn 기업의 지방 유치 지원
 - ◆ 해외로부터 U-turn하는 기업의 지방투자 및 정착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존'을 지정,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및 입지비용 지원

21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를 확립

-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의 협의기구 운영
 - ◆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 지방행정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와 유관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
 - ◆ TP, 산업단지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도 협의기구에 참여시켜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
- 창의적이고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현장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
 -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상업성·사업성 평가 전문기관, 고위험 기술에 투자 가능한 엔젤자본 육성
 - ◆ 창업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의 마케팅과 시장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

22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1) 지방도시 쇠퇴와 도시경제 악화의 악순환

- 대다수의 국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
 - ◆ 국민 10명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2010년 도시인구 비중 90.6%)
 - ◆ 도시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활성화는 필수
- 지방도시 쇠퇴로 지방경제는 붕괴위기
 - ◆ 2005~10년간 전국 144개 도시 중 55개(38.1%)에서 도시쇠퇴가 진행중이고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 41개를 포함하면 96개(66.6%)에 달함
 - ◆ 지방도시의 쇠퇴는 구매력 감소→소비위축→기업위축→일자리감소→지역경제 침체→지역자본이탈→투자위축→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중추도시 대부분에서 도시쇠퇴 진행
 - ◆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쇠퇴가 가장 심각하며, 일부 중규모 도시에서도 상업지의 쇠퇴가 두드러짐
 - ◆ 중소도시에서는 인구유출과 도시경제 침체로 원도심과 주변부가 동시에 쇠퇴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 **도시는 경제! 특히 중추도시 경쟁력은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
 - ◆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시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했고, 특히 도시쇠퇴나 지역간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
- **지방 대도시의 거점·중추기능을 회복해야 중소도시도 소생 가능**
 - ◆ 지방 중추도시시는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공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
 - ◆ 지방대도시의 거점기능 상실은 중소도시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쇠퇴로 이어짐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
 - ◆ 지방 중추도시권을 육성해야 지방의 대도시권이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발전을 견인 가능
 - ◆ 지방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을 지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

25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① 지방 중추도시권의 설정과 특화 육성

-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중추도시권 설정**
 - ◆ 지역 특화발전의 거점인 대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쇠퇴된 도시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 ◆ 중추도시권의 공간 범위는 도시권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
-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도시권별 특화발전 모색**
 - ◆ 부산(울산, 창원)권 :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의 핵심 도시권으로 육성
 - ◆ 대도시권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중견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역별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
 - ※ 대구(구미), 대전(세종, 청주), 광주(나주), 전주(익산, 군산)
 - ◆ 중소도시권 : 인구 규모 20만명 내외의 도시 중 대도시권의 영향권,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천안·아산, 포항·경주, 여수·순천·광양, 진주·사천, 제주, 원주, 춘천, 안동·영주

26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②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원도심 및 도시 경제기반 재생 : 중심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 원도심 재생은 도시 중심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상업·업무기능의 재생과 도심 주거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추진
 - ◆ 역세권 재개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도시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일자리, 상업기능의 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기성시가지의 정주환경 재생
 - ◆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금융·조세지원을 통해, 도심 폐가·공가 정비 또는 리모델링, 취약계층 주택개량 등 주거기능 회복과 일자리 마련에 기여
- 민자유치 활성화와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 도입
 - ◆ 지방도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부 개발방식, 민자유치, debt financing, 도시재생 기금조성(예: revolving loan fund) 등 다양한 재생금융/투융자기법 개발, 지원
 - ◆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상호협조방식, DIY, 사회적 기업형 등 다양한 재생기법 실험, 개발, 보급

27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③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방 명문 고교 설립·육성
 - ◆ 지방 소재 우수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 우선 지원
 - ◆ 지방도시에 명문학교 설립·육성 지원
- 도시권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 의료체계 확충
 - ◆ 대형병원을 도시권 거점병원으로 지정, 육성하고 거점병원 중심의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 도시권내 지자체간 연계교통체계 개선
 -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도로망 확충, 도시권 내부의 혼잡·단절구간 개선, 대중교통의 광역 네트워크화, 커뮤니티 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생활 기반시설 및 문화, 체육, 환경시설의 공동 이용
 - ◆ 도시권 단위의 하수·폐기물처리장, 체육관, 문화원 등의 공동 설립·이용사업 지원
 - ◆ 녹지공간, 보행자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 쇄신

28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④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 중추도시의 중심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 질적 향상에 역점
 - ◆ 도시권 특화산업, 도시재생사업, 삶의 질 향상사업, 도시권 인프라 정비개선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 정비
 - ◆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은 특별회계를 통해 포괄지원
- 중추도시권 육성 관련 법령의 정비
 - ◆ 단기 : 균특법 개정을 통해 중추도시권 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 지원 조항 추가
 - ◆ 장기 : '중추도시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재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도시권 계획체계, 교통망 정비에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
-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 체계 정비
 - ◆ 광특회계를 개편하여 도시활성화 계정을 설치하고 개별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 중추도시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이관하여 재원 확대

29



3. 농어촌 활성화

1) 농어촌의 오늘과 내일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공동체 붕괴와 농어촌 활력 상실
 - ◆ 최근 10년간 ('00년 ~ '10년) 도시인구 10.1% 증가, 농어촌인구 3.7% 감소
 - ◆ 65세 이상 인구비율 ('10년)은 전국 11.3%, 농어촌 20.6%
-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의 걸림돌
 - ◆ 도시민의 40.3%가 삶의 질에 만족, 농어촌 주민은 29.7%에 불과
 - ◆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85% 이상이 도시에 집중
 - ◆ 복식학교 비율 ('10년)은 도시 1.7%, 농어촌 28.6%
-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증가로 향후 농어촌 인구는 증가할 전망
 - ◆ 2010년 향촌형 인구이동이 향도형 인구이동을 추월
- 향후 농어촌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정주공간, 휴양공간, 산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전환될 전망
 - ◆ 따라서, 이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농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

31

3. 농어촌 활성화

2)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
 - ◆ 농어촌정책의 영역이 농어촌관광, 환경 및 경관보전 등의 분야로 확대
 - ◆ '삶의 질 특별법' 제정 (2004년)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2008년)으로 지역의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상수도 보급률, 의료기관수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
- 기존 농어촌 정책의 한계
 - ◆ 하드웨어시설 위주의 지원정책, 시설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재로 이용률 저하
 - ◆ 귀촌.귀농지원정책은 과도한 홍보 전략과 개별 지원 방식 때문에 지역활성화 효과 미흡
 - ◆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비 부담이 커 실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
 -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실질적 역할 미흡

32

3. 농어촌 활성화

3)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과제

① 중심지 읍·면을 농어촌의 생활 거점으로 육성

- 마을 단위의 분산투자로는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개선에 한계
 - ◆ 소도읍 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지역주민의 체감효과 매우 낮음
- 농어촌 중심지인 읍·면을 공공서비스공급의 중심지와 농어촌생활 거점으로 육성
 - ◆ 기초지자체별로 1~2개 읍면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서비스 배치
 - ◆ 귀촌귀농인들이 농어촌 '중심지'에 정착하도록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개선
-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복합지원센터 설치
 - ◆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도 제고
 - ◆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격지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 ◆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 및 관리(사회적 일자리 창출)

33

3. 농어촌 활성화

-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이용·관리
 - ◆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관리비 절감 및 이용률 제고
 -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시설의 이용, 관리 효율화
 - ◆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②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정책의 개선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항목별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차별화
 - ※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은 주거, 교통, 보건의료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
 - ◆ 이행 실태가 저조한 항목별로 추가지원 등 검토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 ◆ 대안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34

3. 농어촌 활성화

③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귀촌·귀농 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추진
- 귀촌·귀농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빈집, 지역일자리, 농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 제공
 - ◆ 전국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포털사이트 운영
- 민간주도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 조직 구성 및 지원
 - ◆ 귀촌·귀농인과 지역주민이 소통 및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 귀촌·귀농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활동가를 발굴하여 육성
- 소규모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 빈집을 리모델링, 귀촌귀농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
 - ◆ 읍·면 소재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거공간 확보
 - ◆ 향후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35

3. 농어촌 활성화

④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 각기 다른 부처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 및 예산 낭비 발생
 - ◆ 도로건설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미흡
- 지역발전 지표에 의해 50개 정도의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
 - ◆ 지역 특화자원 개발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 ◆ 지역 특화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포괄지원을 통한 지자체 자율방식으로 추진
 - ◆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재원을 차등 배분
 - ◆ 지자체간 협력 여부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 지자체, 주민, 지역기업, 대학 등이 공동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 ◆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지원 및 컨설팅 강화
 - ◆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사업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36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1) 재정지원의 한계와 확대 필요성

● 재정은 지역발전의 성패 좌우

- ◆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주재원확보가 관건
- ◆ 국가재정 중 지자체 세입은 20%에 불과, 재정사용액은 42.2%, 지방채무는 증가
※ 중앙, 지방, 지방교육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각각 42.5%, 42.2%, 15.0%
- ◆ 지방재정의 의존 비율 59%, 국고보조금 비율 35%를 차지, 지역발전 위한 자율재원의 확대 필요(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 51.9%; 재정자주도 76.7%)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 확보 필요

- ◆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경기 침체,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
- ◆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증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신호(지자체 총지출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 2007년 15.4% -> 2011년 28.5%)
- ◆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확보는 필수!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2)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 광특회계 : 자율성 미비, 규모 축소, 부처사업과 중복
 - ◆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개편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사업비 규모 축소(2009년 9.58조원 → 2012년 9.41조원)
 - ◆ 광역선도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 모호; 부처간 또는 부처내 경쟁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 효율성 및 효과성에 의문(특히 책임성 문제 제기)
 - ◆ 재원배분 방식에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채택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포괄보조금 : 기초지자체 자율성 침해와 평가체계 부실
 - ◆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보조금 이관,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운용에 자율성 제약
 - ◆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별 평가로 실시,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중복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모호
- 국고보조사업 : 경직성 및 지방부담 확대와 사업 선정의 불합리
 - ◆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유형 및 사업선정 원칙이 불투명하고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비율' 설정이 불합리
 -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최저 또는 표준 서비스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계

39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2)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 지방소비세 : 배분기준 및 지역간 재정격차에 대한 논란
 -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 및 인식 차이로 공감대 형성 곤란
 - ◆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시도간 차등 배분되고 있으나 배분 기준에 대한 논란 증폭
 -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지역간 배분을 둘러싼 논란 지속
※ 수도권 22.5%, 비수도권 광역시 28.1%, 도 49.4%로 배분
- 지자체의 비효율적 재정지출 및 복지예산 증대로 자체사업 축소
 - ◆ 지자체의 중복 투자, 선심성 사업, 타당성 검사의 미비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
 - ◆ 지방재정 전체 세출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수요 증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축소
 - ◆ 복지사업 등 90개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계획이나 급증하는 복지사업을 충당하기는 역부족

40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① 광특회계 개편 및 운영효율 제고

● '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가칭)'로 개편, 4개 계정 설치

- ◆ 일자리 창출, 도시권 육성, 농어촌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분야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특화
- ◆ 지역일자리기반강화 계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지방투자 촉진 관련 사업 등 지원
 - 기존사업 중 지역산업과 인력양성 등을 재편, 타 회계 사업 이관 및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은 기존의 전략, 특화산업 지원사업을 중기청 사업과 통폐합 후 재구성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
 - 인력양성·산학협력은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Co-op 교육, 후진양성 체계 구축,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평생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대학·전문대 역량 강화와 LINC 사업 지원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 개편하여 U-turn 기업, 지방이전 기업 지원

41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 ◆ 도시활성화 계정 : 각 부처별 도시 관련 사업을 조정·통합하여 재원확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활성화 사업 지원
 - 기존 광특회계 사업 중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및 18개 기능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권 관련 중앙부처 사업을 선별하여 기능별로 재편
 - 신규사업으로 도시권 연계교통망, 도시재생, 문화예술 테마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등 추진
 - 운용방식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후 관련 부처와 협의, 지역위의 조정 및 확정 후 각 지자체 별로 포괄보조금 지원
- ◆ 농어촌특화발전 계정 :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발전, 교육·의료 등 격차완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 지원
 - 사업 구성은 시·군 주도의 낙후지역 발전사업, 국가 주도의 삶의 질 격차 완화 지원 사업 등
 - 운영 방식은 시·도별 배분에서 시·군별 직접 배분방식으로 전환
-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기존 사업을 유지 (변화 없음)

42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 회계 및 기금간 사업 조정을 통해 회계 운용 효율화
 - ◆ 기존 광특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관될 사업은 5개 단위사업, 1.3조원 규모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국가R&D와 중복되는 사업, SOC사업, 국가정책 목표 하에 지정 및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 ◆ 타 회계·기금에서 신설회계로 이관될 사업은 27개 단위사업, 9,796억원 규모
 - 도시재생관련사업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귀촌·귀농 정책관련 사업, 생활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 일자리·지역/도시경쟁력 관련 사업 등
- 포괄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 포괄보조금사업의 배분방식인 시도별 배분을 시군구 배분으로 조정하고 공식(formula)에 의한 배분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 중앙부처는 사업지침을 간소화하여 간섭 최소화; 지자체 자율성 보장(지역발전위원회에서 침해소지 여부 검토 및 확인)

43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 ◆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 자의성 배제
 - ◆ 국고보조금의 운영 경직성 완화, 효율적 활용을 위한 책임성 강화
 - ◆ 10~100%의 기준 보조율을 5단계 내외로 간소화, 차등보조율의 합리적 조정
 - ◆ 분권교부세 제도 중 복지사무를 국가 사무로 환원, '복지교부세' 신설 검토
 -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정 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의무화
- 지방소비세제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확보
 - ◆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5% 인상을 추진하고, 배분 가중치를 조정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
 - ◆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생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며, 배분 기준을 합리화, 현실화

44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무리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
 - ◆ 재정운용시스템인 e-호조시스템과 연계하고 재정지출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에 '재정지출 효율성 점검 지표' 개발 추가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 및 민생재정 확보
 - ◆ 분권교부세를 복지교부세로 전환하고, 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며, 지방이 집행하는' 체제로 시스템 구축
 - ◆ 국고보조금 보조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차등보조율 지표 마련)
 - ◆ 복지지출 상한제 도입: 복지지출 관련 제도정비 전까지는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수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 원칙

45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1) 지역정책 집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역정책 집행체계

-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획, 계획 수립, 사업 평가 등의 기능 수행
- ◆ 지식경제부는 지역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주도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소관 사업 집행
- ◆ 지역에서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전담기관 등 설치

● 중앙 :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 ◆ 지역발전위원회는 권한, 인력, 재원이 부족하고, 광특회계예산 사전심의기능이 없는 등 범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 지식경제부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및 종합적 관리에 있어 역할 미흡

● 지방 : 지역 집행기관의 역량 부족 및 협력체계 미약

- ◆ 광역발전위원회 권한이 미약하여 지역 총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 집행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정책시너지 창출 제약
- ◆ 지자체는 기획, 집행, 재정에서 역량이 부족;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 부재

47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①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 지역발전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 ◆ 부처간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 법적 지위 전환 검토
- ◆ 행정위원회로서 지역발전 전략 및 계획 수립, 광특회계 예산 심의, 연계협력사업 시행, 정책성과 평가, 교육훈련, 국제교류 등의 기능 수행

● 지역정책 주무부처 교체

- ◆ 주무부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정책의 총괄, 조정, 관리 기능 수행
- ◆ 기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부처 위상 및 정책관리 역량,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등을 감안한다면 타 부처로의 이관이 바람직
-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역량과 새 정부 지역정책의 기초 및 역점 시책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를 선정

48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② 지역 집행기관의 역할 강화

● 광역발전위원회 기능 재편 및 지역 집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 ◆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기관 명칭, 위상, 기능을 재편하여 지역별 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 사업 관리 및 평가, 조사·분석 등의 업무 수행
 -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에 설치
- ◆ 광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TP, 선도산업지원단, 산단공, 중기청, 노동청, 국토청 등 지역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역할 강화

- ◆ 광역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 기초지자체 사업 기획·집행·평가 지원(TA) 및 중복 조정, 연계협력 지원 등 중개기능(Clearing House) 강화
- ◆ 기초지자체: 독자적인 사업 기획,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 지자체의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 자율성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확대, 민자유치 및 지방채 발행 지원 등 추진

49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③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중요성

- ◆ 개별 지자체로는 규모경제 확보가 어렵고 예산부담이 과중한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개발사업의 비용 절감, 기업유치 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 필요

● 연계협력사업 확대

- ◆ 문화관광 및 R&D 분야에 치중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일자리, 복지, 교육, 인프라(교통, 환경, 수자원, 방재, 안전) 등으로 확대
 - ※ 기초-기초간, 기초-광역간, 광역-광역간 협력
 - ※ 도시-도시간, 도시-농촌간, 농촌-농촌간 협력 등

● 연계협력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정비

- ◆ 광특회계 연계협력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매칭비율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 ◆ 연계협력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간 협약체결, 추진조직 구성, 재원분담, 협약 이행장치 등을 담은 (가칭)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법 제정 추진

50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④ 지역정책 평가제도 개선

● 지역발전위원회 총괄평가 기능 강화

- ◆ 재정사업자율평가(기재부)를 지역위 평가로 일원화하고, 중앙부처의 지자체 자율 편성 사업에 대한 평가 폐지

● 지자체 평가 부담 완화 및 내실화

- ◆ 평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포괄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대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평가
- ※ 연차별로 중점사업 또는 중점 사업군을 평가하는 집중평가제 도입

● 성과중심 및 현장평가 체계 구축

- ◆ 구체적,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현장중심의 output 보다는 outcome을 중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사업에 도움되도록 평가제도의 내실화
-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대하고, 제도개선 반영 장치 강화

51



감사합니다

발표② :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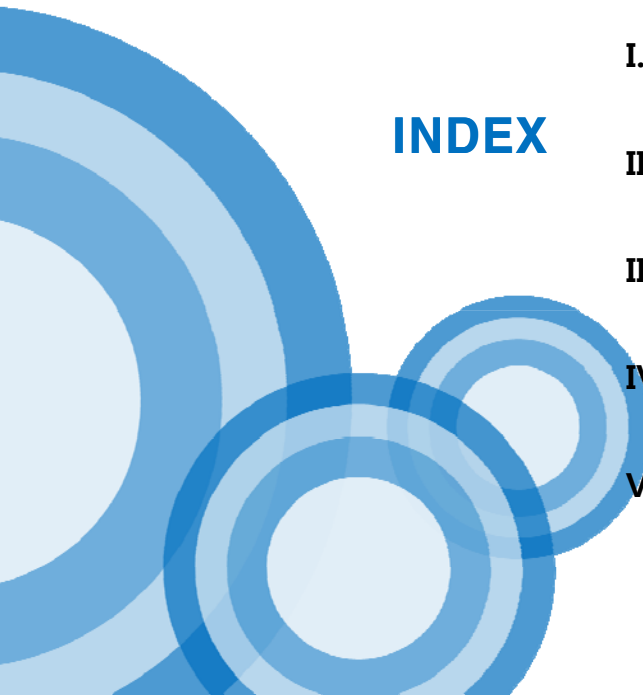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201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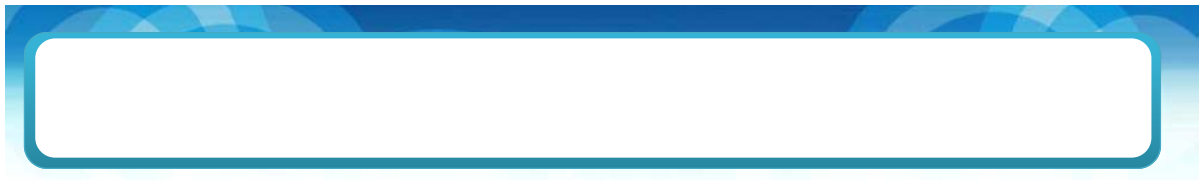
허재완 (중앙대)



INDEX

- 
- I. 왜 “중부경제권”인가?
 - II.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
 - III. 중부경제권의 위상과 역할
 - IV. 역할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 V. 맺는 말

I. 왜 중부경제권인가?



▪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광역경제권 개념의 유지는 지속되어야 함

-

* → or . ??

-

* → : EU (27)

* → (MCR: Mega-City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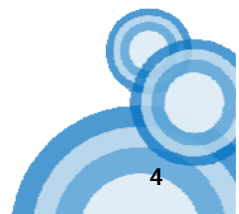
→

→

< 40대 글로벌 광역대도시권 >

- 1/6

- GDP 60%, 85%



■ 실제 생활권과 관계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

*



구분	해당구역
서울권	서울특별시(02)
경기·강원권	인천광역시(032), 경기(031), 강원(033)
충청권	대전광역시(042), 충남(041), 충북(043)
영남권	부산광역시(051), 대곡광역시(053), 울산(052), 경남(055), 경북(054)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062), 전북(063), 전남(061), 제주(064)

KT의 광역전화통화권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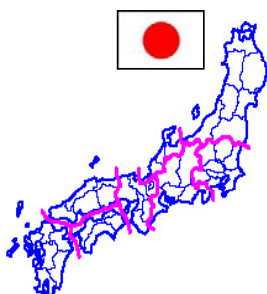
5

■ 규모의 경제를 취하기에는 소규모



“ ”

	국토면적	광역경제권 수	비고
	377,915 ()	8	
	643,801 ()	6	
	243,610 ()	9	
	99,720 ()	7	5+2



6

- 수도권 외연적 확산현상을 감안할 때 충청권 및 강원권을 포괄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서 '중부경제권' 개념의 설정이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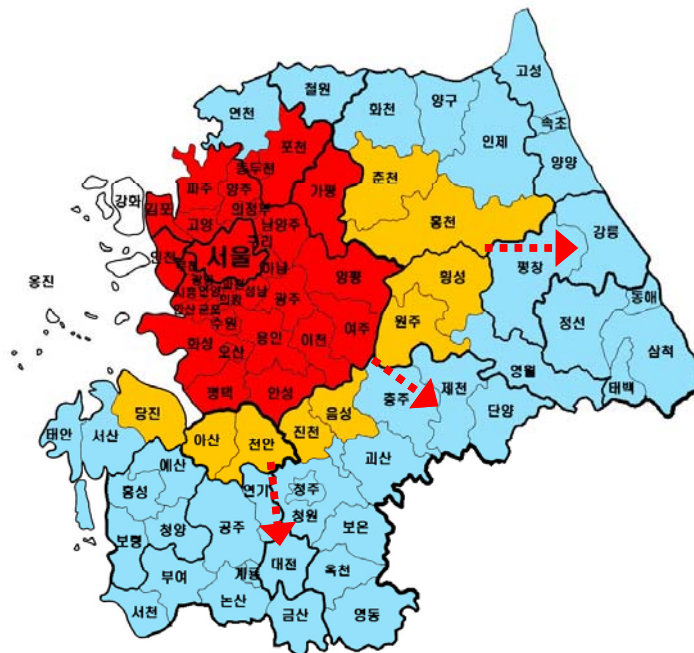
*

*

*

9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 및 중부경제권



10

II.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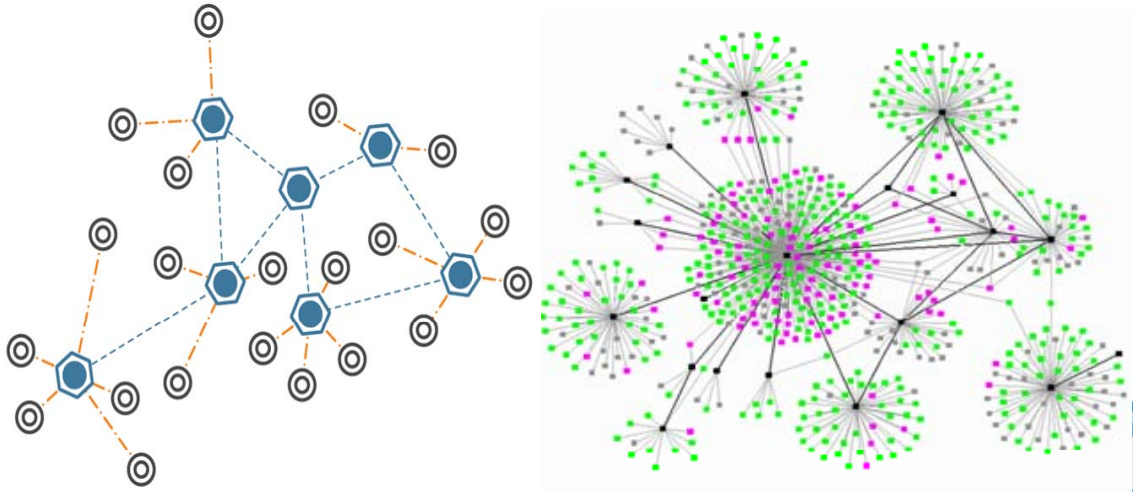


■ 중부경제권의 구성

- 3
* - -
- 3
* + +
- 1, 2, 1, 4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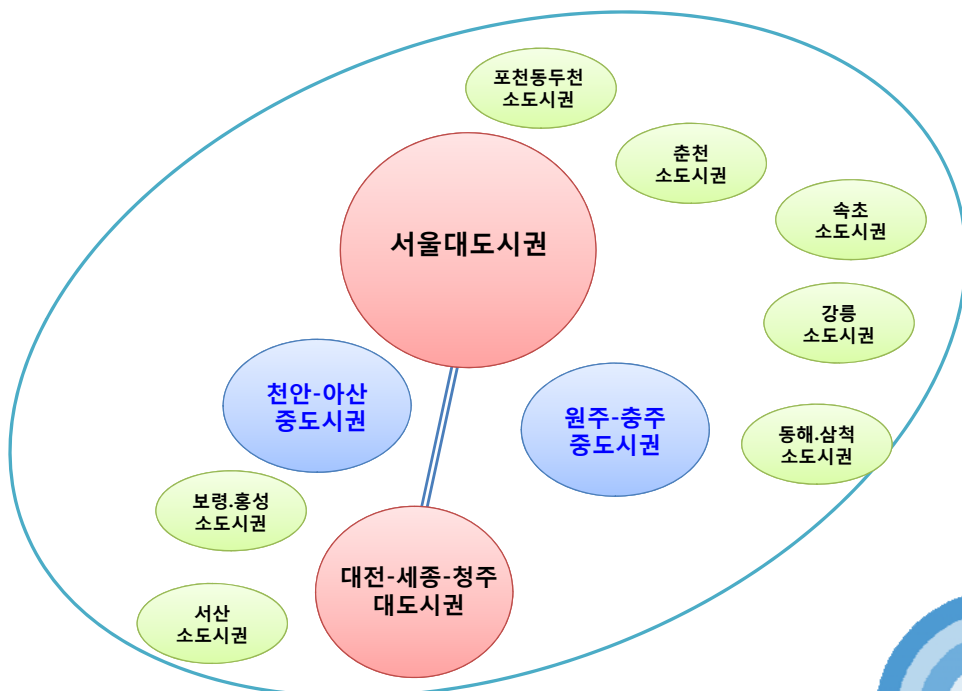
▪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로 구축



13

▪ 중부경제권의 도시권 체계

- 2 →
- 2 →
- 7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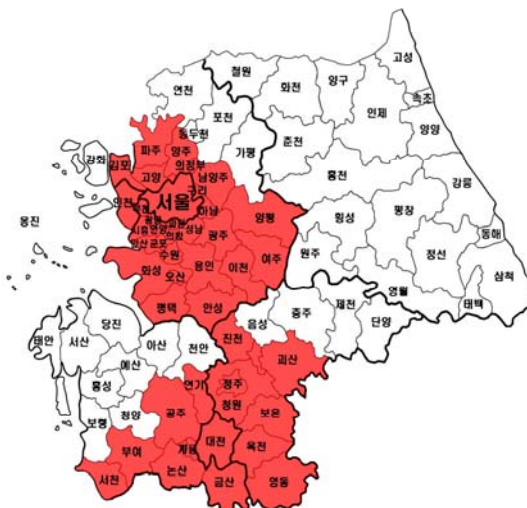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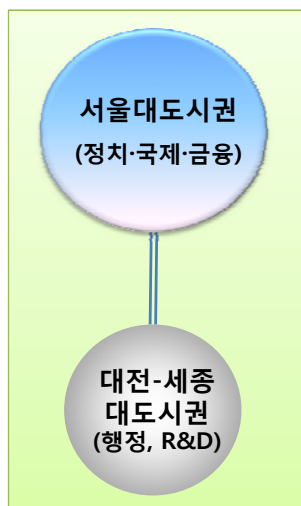
■ 중부경제권 도시권 구성

도시권	중심도시	배후도시	인구(천명)	면적(km ²)
대도시권	서울·인천·수원·고양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부천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안성시, 평택시	24,571,900	10,186
	대전·세종·청주	계룡시, 논산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3,153,602	8,281
중도시권	천안아산	-	822,864	1,127
	원주충주	제천시, 음성군, 영월군, 횡성군, 단양군	867,994	6,165
소도시권	춘천	가평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476,782	6,955
	서산	당진군, 태안군	368,618	1,941
	포천동두천	연천군, 철원군	348,416	2,393
	보령홍성	예산군, 청양군,	314,967	2,034
	강릉	평창군	262,125	2,504
	동해삼척	태백시, 정선군	259,191	2,890
	속초	고성군, 양양군	142,343	1,394
소도읍권	강화군	-	67,104	411
	웅진군	-	18,739	172

15

■ 대도시권 체계 → 1핵, 1부핵 대도시권

- 1 , ()
- * 1
- 1 , ,
-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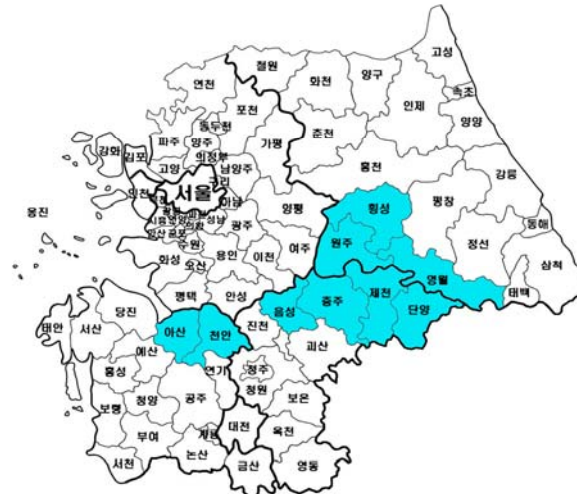
■ 중도시권 체계 →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규모 도시권

- 50 ~100 2

* , ,

-
*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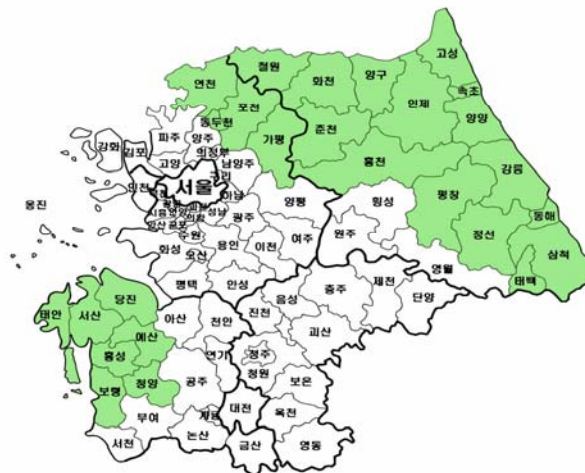
*



17

중도시권	기 능	비 고
	- * * IT - *	
	- R&D * * - ,	

18



19

20

소도시권	기 능
	- DMZ * -
	- * Global Top Stem material * - *
	- 2018 * - * *
	- * * -

21

III. 중부경제권의 위상 및 역할

■ 중부경제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경제 중심지

- (GDP) 61%

* 20%, 42%

	인구(명)	면적(km ²)	인구밀도	GRDP(백만원)
한반도경제권	72,110,388 (100.0%)	223,350.2 (100.0%)	484.8	1,172,742,223 (100.0%)
중부경제권	30,349,803 (42.1%)	45,277.6 (20.3%)	670.3	728,763,554 (60.9%)
남부경제권	17,698,585 (24.5%)	53,086.0 (23.4%)	333.4	433,509,939 (36.2%)
북부경제권	24,062,000 (33.4%)	123,138.0 (56.3%)	195.4	24,236,8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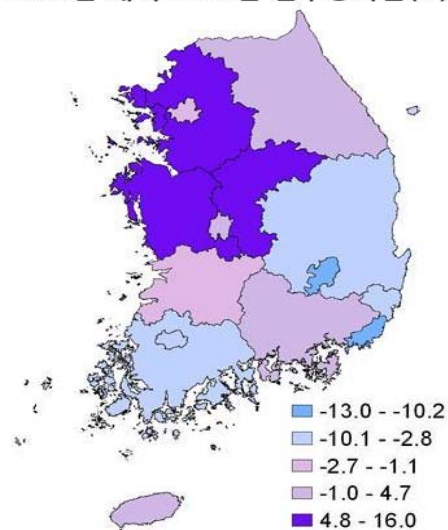
: (Kosis), 2010

23

■ 중부경제권은 2040년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

* 670.3 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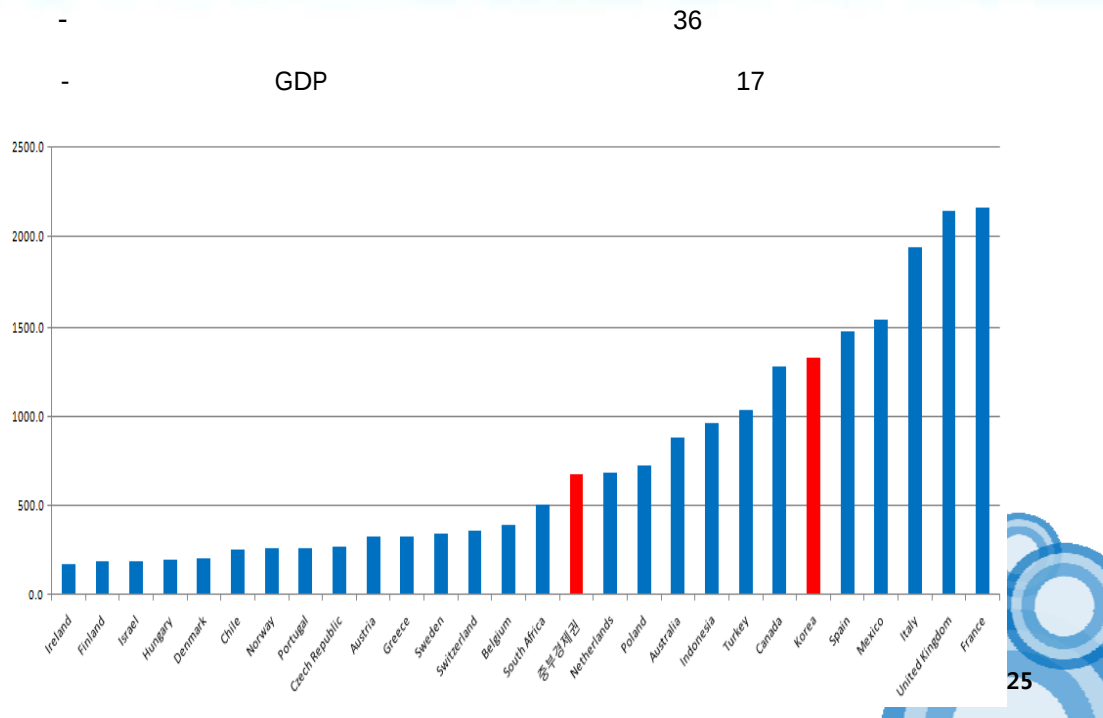
2010년 대비 2040년 인구증가율(%)



(2012) 201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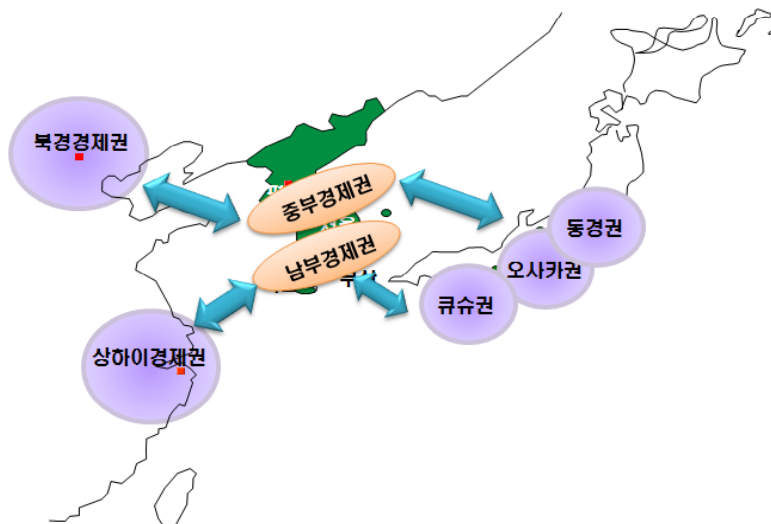
24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글로벌급 광역경제권



■ 동북아 중심지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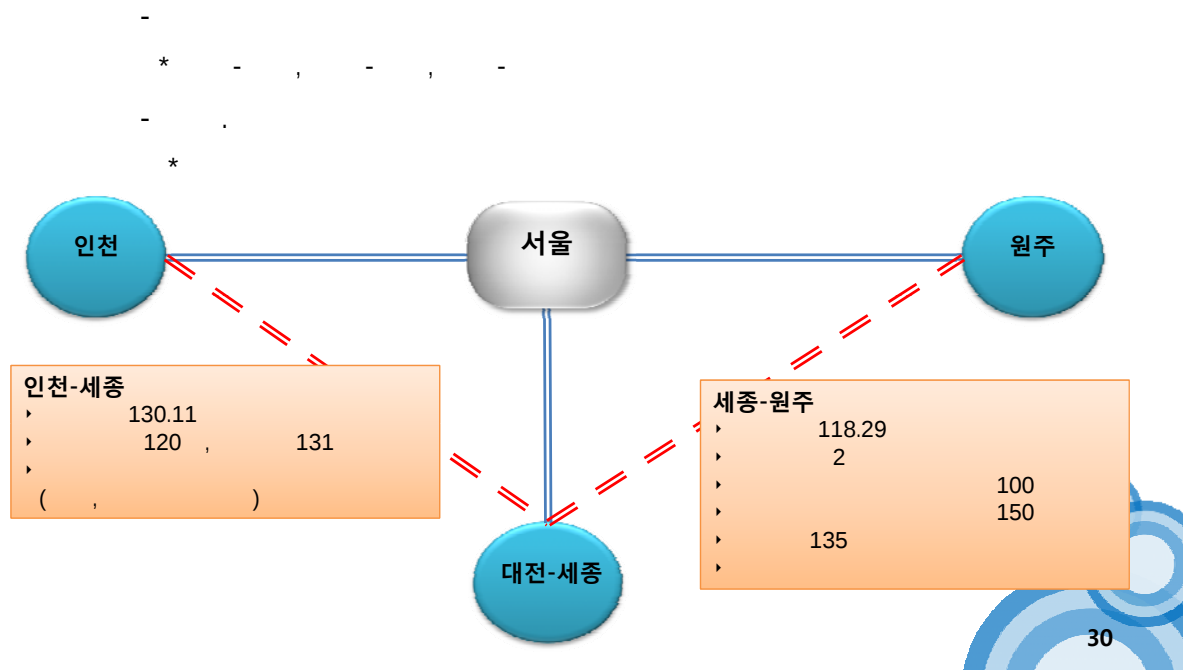
2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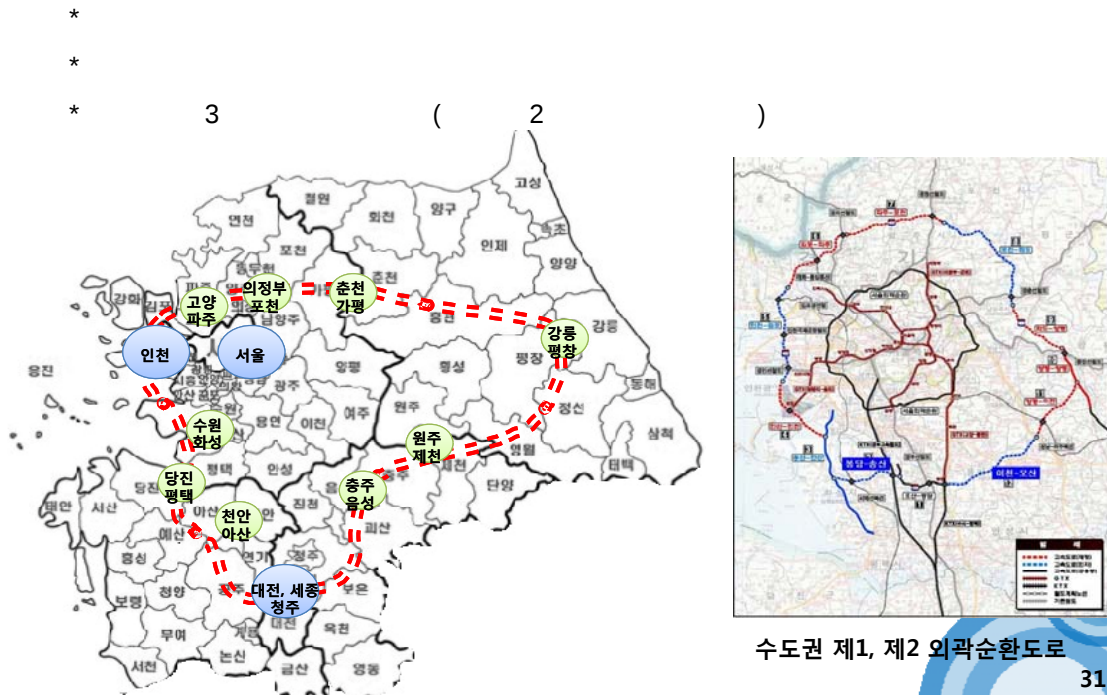
IV. 중부경제권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 주요 거점간 연계교통망을 정비하여 반나절 생활권 구축



▪ [가칭] ‘중부권 외곽순환도로’ 의 구축



중부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중부경제권 내에는 4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음

✓ → (IFEZ), (YESFEZ)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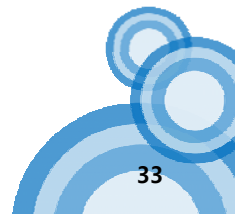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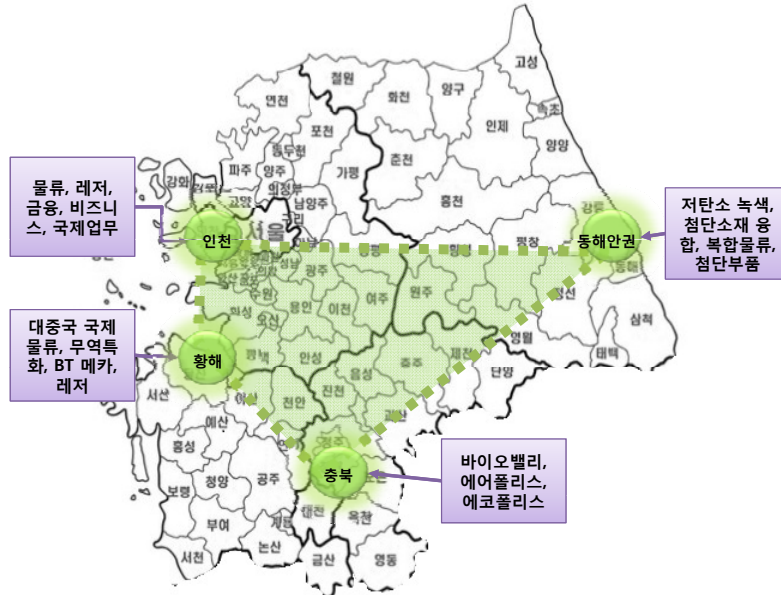
				()
	2003~2020	170	78.0	19.3 (91)
	2008~2020	16	4.7	0.1 (18)
	2012~2023	8.61	1.1	-(30)
	2013~2020	10.77	2.9	-(20)

▪ 동북아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필수적

✓ 4

→ () ‘ EFZ ’

✓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위한 규제 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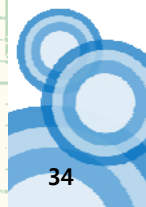
✓

✓

▪ (가칭) ‘중부권 통합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

✓

✓



지역공항의 기능 분담을 통한 활성화

중부경제권에는 4개의 공항이 운영 중

- →
- →

공항 별	2004 .11	2006. 11	2012.11*
김포국제공항	2,051,652 ()	2,379,235 ()	2,814,981 ()
청주국제공항	64,100 ()	84,943 ()	120,000 ()
양양국제공항	4,384 ()	4,394 ()	32,000 ()

주: 김포공항은 2011년 11월, 청주공항은 2012년 6월, 양양공항은 2012년 11월자료

35

국제적 경기불황 속에서도 한국은 항공여객 수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중부권공항들이 특히 선전하고 있음

- 2002 7.3%
- 100%
- 2002 250% 12
- 3

양양공항 기적의 부활 (조선일보. 2012. 11.1)

3 9 0 → 3
...
(BBC) . 2008 11 2
8 14 9 (0) 70
2012 10 30 224 10 2
3300 3 2000

36

▪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공항활성화 및 상호연계성 강화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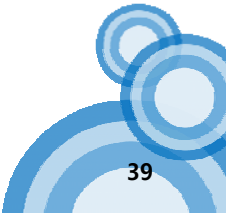
37

● 중부권 R&D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중부권은 우리나라 R&D산업의 중심지

- → R&D 65%
- * R&D 72%, R&D 55%
- * R&D
- * : R&D , DMC,
- * :
- →
- * , R&D ,
- * : 16
- → R&D
- * :

38





국제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한국이 국제컨벤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

* G-20 ,

-

2011

*

469

4.6%

6

	가	2011	2010
1	가	919	725
2		744	936
3		598	741
4		557	686
5		533	597
6		469	464
7		421	499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UIA) International Meeting Statistics 2011



중부권이 국제컨벤션을 주도하고 있음

- 2011

() 232

*

5

-

*

()

2012 58

*

컨벤션산업(MICE)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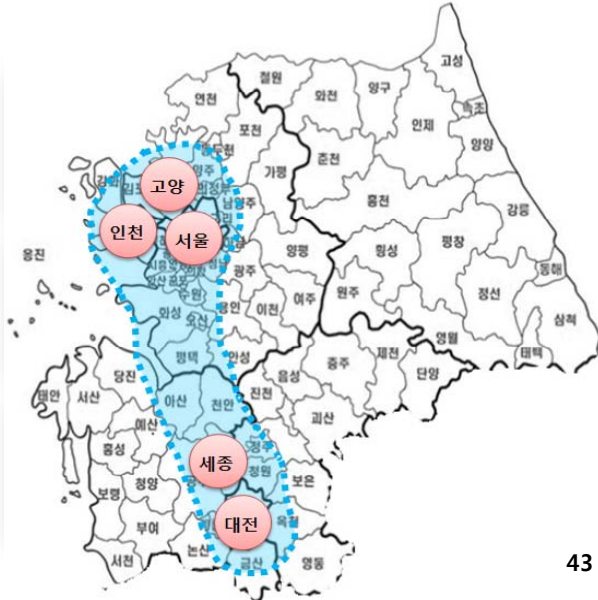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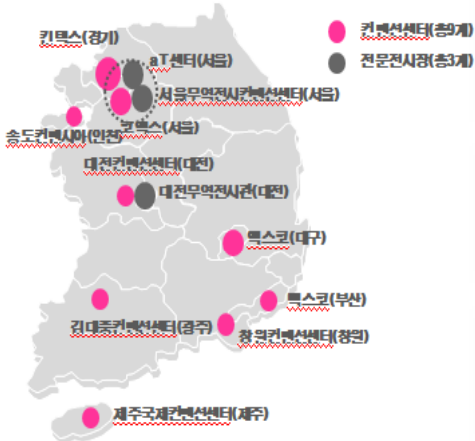


■ 서울-고양-인천-세종-대전을 잇는 (가칭) '중부권컨벤션벨트'를 구축

* KINTEX, COEX, DCC(),

*

■ 국내 전시·컨벤션 센터 현황



43

● 한방·양방 통합 의료관광 벨트 조성

■ 중부권에서 의료관광이 빠르게 성장

- 2011 344,407

*

* 2010 224,260 53.6%

* 90%

* 64%

*

*

*



강남구의 의료특구 추진

44

▪ 의료관광은 일반관광에 비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

- 100

* 176 , 237 , 136

		가가		
	176	80.4	237	136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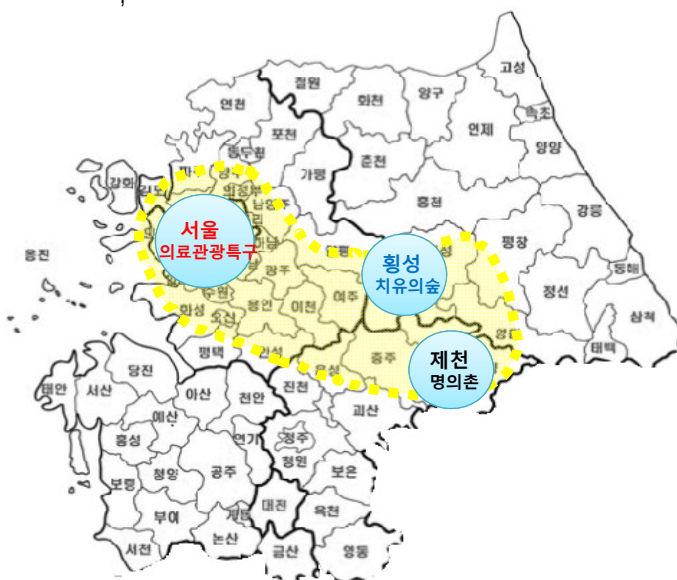
- 1 149 , 662



45

▪ 중부경제권 통합의료관광 벨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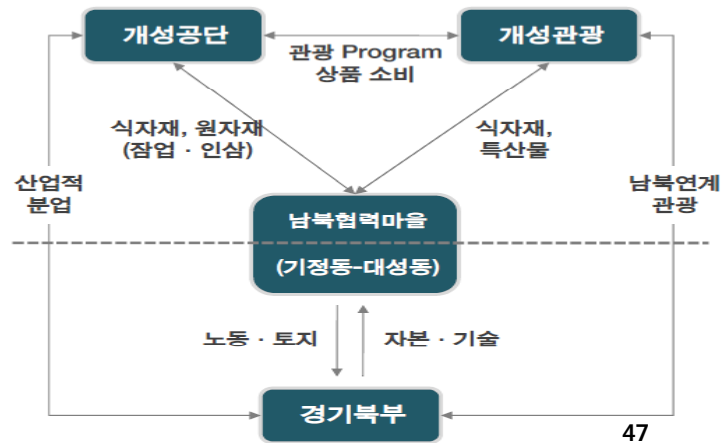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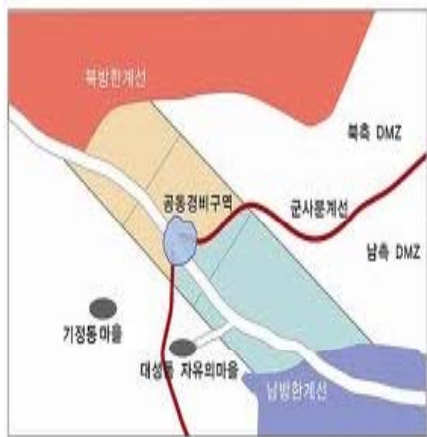
Healing



46

한반도 중추관리기능 강화: 남북협력사업 추진

남북대립의 선전마을 (기정동-대성동) 을 남북협력의 상징공간으로



47

DMZ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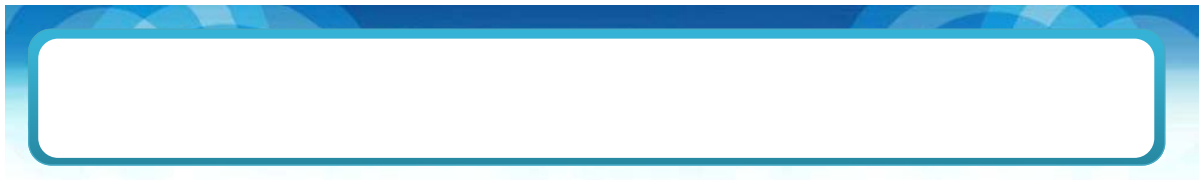
- DMZ

*

*



V. 맺는 말



▪ 작동가능한 광역경제권의 형성이 선진국 국토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 → ‘ (Metro Nation)’

- 침체의 늪에 빠진 미국경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오바마 新행정부는 대도시권 국가론(Metro Nation)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 (Office of Urban Policy)

*

- 오바마 新행정부의 대도시권정책(Metro Nation Policy)의 핵심

*

*

▪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부경제권을 매개로 한 ‘한반도경제권’을 형성하는 장기 전략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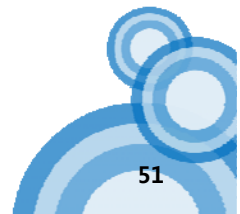




- * 2 ()

- 3

* 8,000



51



THANK YOU

발표③ :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이정식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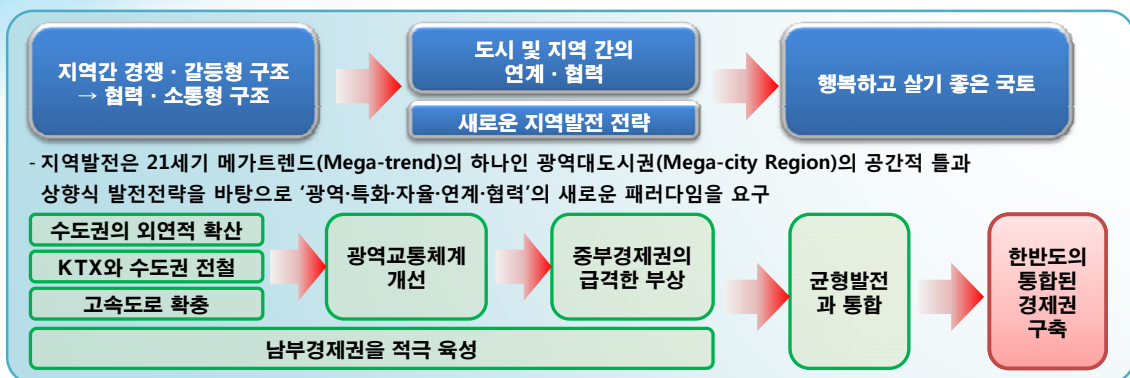


I. 구상의 개요



I. 구상의 개요

1 구상의 배경



2 구상의 내용

- 기존의 물적 계획과 종합계획의 틀을 벗어나 전략계획 차원의 발전전략을 제시
- 공간적 범위 :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포함
- 내용적 범위 :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를 토대로 대·중·소 도시권의 주요 기능과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1 광역대도시권의 도래

세계 여러 나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 또는 거대지역(super regions)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의 ‘지역국가(region states)’ Petrella의 ‘도시지역(city regions)’ ,
Florida 교수의 ‘Mega-region’ 등이 대표적 사례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Mega-city Region 개념의
광역도시권 발전전략을 국토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지역생활권, 지역경제권, 광역권, 광역경제권 등의 계획
지역(planning region) 위주의 공간구분 대신,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 위주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으로 국토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

도시인구의 분포

- 市級 도시인구(인구 10만 명) 비율 : 2000년 87% → 2010년 90%
(2030년 경에는 전 국토가 하나의 거대도시권(One Metro-nation)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
- 수도권 인구비중 : 2000년 46.3% → 2010년 49.1%
-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총인구 : 2000년 73% → 2010년 76%

도시 규모별 시 인구(명)	2000년			2005년			2010년		
	수	인구	비율 (%)	수	인구	비율 (%)	수	인구	비율 (%)
10 30만	39	6,679,797	14	41	7,465,090	16	36	6,957,504	14
30 50만	13	4,559,545	10	12	4,603,299	10	11	4,306,560	9
50 100만	10	6,766,410	15	10	6,914,030	15	11	7,828,304	17
100만이상	7	22,249,250	48	8	23,293,442	49	9	24,508,286	50
계	69	40,255,002	87	71	42,275,861	90	67	43,600,654	90
전국인구	46,136,101			47,278,951			48,580,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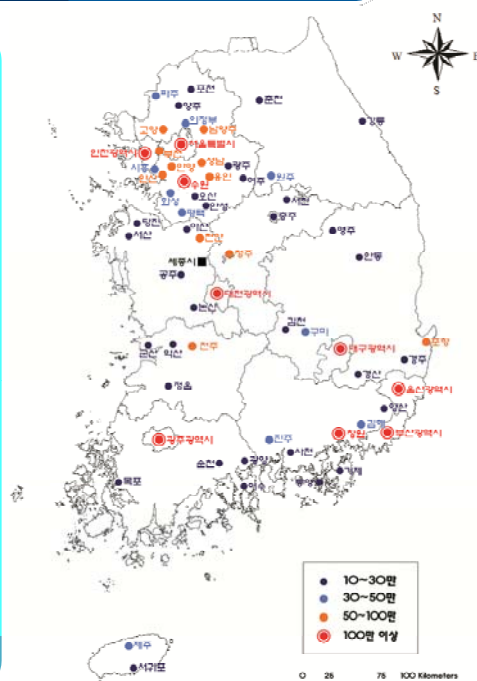
인구규모별 도시 수 및 비율 (자료: 통계청)

7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

- 지난 10년간 중소도시보다 인구 50만명 이상
중규모 도시의 성장이 더욱 빠름
- 강원도와 충남 서부, 전북의 동남부, 전남의
중남부, 경북의 중북부, 경남의 서북부 지역
등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음



인구규모별 도시 분포(2010)

8

3 수도권 외연적 확산과 중부경제권의 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1994)』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입지, 대학, 공공 청사, 대규모 관광단지 등에 대한 차등규제 → 충청권 등으로 개발이 확산
- 수도권 전철의 연장 : 서울~천안·아산은 직접적 생활권
 - KTX 개통 : 서울~대전 반나절 생활권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경기~원주·평창 등의 접근성 제고(서울~강릉·속초 3시간)

- 수도권과 대전·충청·강원 등이 단일 생활권·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 서울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산, 고속교통 수단의 개통과 간선교통망의 개선
 -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청 등을 중부경제권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남부경제권의 육성이 향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1)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인구와 경제 연왕(2010)

- 남부경제권의 면적은 53,086km²(전국의 53.1%), 인구는 17,698천명(전국의 36.4%)
- 남부경제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중부경제권의 59.5%에 불과
 - 수출 실적은 남부경제권이 중부경제권보다 약간 높음(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 분포)

경제권	시·도	면적(km ²)	인구(천명)	GRDP(10억원)	제조업종사자(천명)	서비스업종사자(천명)
중부 경제권	서울	605	9,794	271,649	273	2,637
	인천	1,029	2,663	56,857	219	354
	대전	540	1,502	26,413	51	274
	경기	10,167	11,379	232,429	1,036	1,709
	강원	16,693	1,472	28,829	43	267
	충북	7,433	1,512	36,233	144	231
	충남	8,630	2,028	76,354	217	295
소 계		45,097(45.1%)	30,350 (62.5%)	728,764 (62.1%)	1,983 (58.0%)	5,767 (66.6%)
남부 경제권	부산	767	3,145	59,531	194	582
	대구	884	2,446	35,632	155	377
	광주	501	1,476	25,140	75	252
	울산	1,059	1,083	59,160	144	173
	전북	8,067	1,777	34,643	99	278
	전남	12,247	1,741	58,750	93	262
	경북	19,028	2,600	78,314	273	384
	경남	10,533	3,160	82,341	390	471
소 계		53,086(53.1%)	17,698 (36.4%)	433,511 (37.0%)	1,427 (41.7%)	2,779 (32.1%)
제주		1,849 (1.8%)	532 (1.1%)	10,469 (0.9%)	9 (0.3%)	115 (1.3%)
합계		100,033(100.0%)	48,580 (100.0%)	1,172,742 (100.0%)	3,418 (100.0%)	8,662 (100.0%)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사회·경제 현황(2010, 통계청, 국토해양부)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2)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격차 심화

- 중부경제권은 남부경제권에 비해 인구, 지역 내 총생산(GRDP),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의 분야에서 집중현상이 지속 (2005~2010년 기준)
- 이러한 격차는 생산자 서비스산업(Producer's Services)의 증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입지 등 경제적 중추기능 뿐만 아니라, 인구와 고급 일자리 등의 쏠림 현상이 향후에도 중부 경제권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구분	인구 비중		GRDP 비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년도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중부권	61.4	62.5	61.6	62.1	59.1	58.0	65.7	66.6
남부권	37.5	36.4	37.4	37.0	40.6	41.7	33.0	32.1
제주	1.1	1.1	1.0	0.9	0.3	0.3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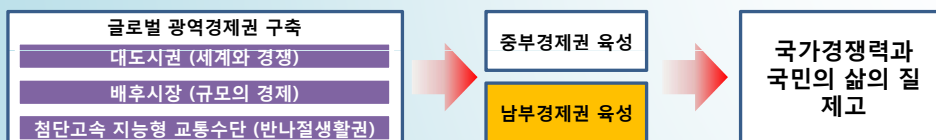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사회·경제지표 변화(자료 : 통계청,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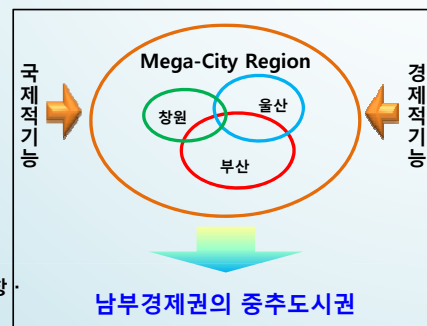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3)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과 함께 남부경제권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구축이 시급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Mega-city Region에 해당하는 대도시권에 국제적·경제적 기능과 도시 기능을 강화 →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권으로 육성
 - 대·중·소 도시권 체계를 구축 → 도시 및 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의 성장동력을 확산시켜 남부경제권의 통합 기반을 구축(대구·구미, 광주·나주, 전주·익산·군산, 포항·경주, 광양만, 진주·사천 등 다핵도시권으로 확산)



12

Ⅲ.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Ⅲ.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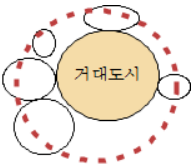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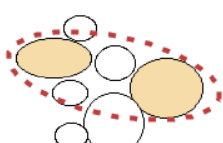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

1) 도시권의 개념 및 유형

 도시권은 중심도시 및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후지역으로서 통근권 및 경제권, 일상생활권 등을 토대로 한 일체화된 기능지역을 의미

- 학자나 지역정책에 따라 city-region, super-region, mega-region, metropolitan-area 등으로 불림
- 최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의 육성 차원에서 Mega-city Region(MCR)이 자주 인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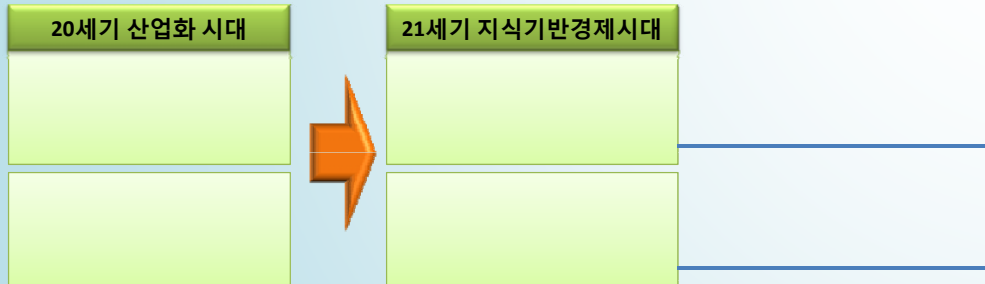
유형1	유형2	유형3
하나의 거대도시가 주변의 배후지역을 경제·정치적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도시권으로 발전한 형태	연담도시 형태의 거대도시 지역으로서 인접한 도시의 배후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 또는 수렴되는 형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접한 중심도시들이 상호 협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혹은 제휴하는 형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네덜란드 Randstad 지역	- 외레순(Øresun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덴마크 코펜하겐 - 스웨덴 말뫼(Malmö) 초광역권의 초국적 연계형태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

2) 도시권의 중요성 대두

21세기에는 규모 및 네트워크 경제(Economy of Scale & Network)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별 도시보다는 도시권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이 구상에서는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 분석을 토대로 주요 도시권의 기능과 발전 전략을 제시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1) 도시권 설정 사례

도시권의 설정 사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11개의 ‘광역도시권’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권개발계획’에서 10개의 ‘광역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5개의 ‘대도시권’

기존의 도시권 권역설정의 문제점

-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책적 요인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근·통학, 업무통행, 여가, 쇼핑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함

2) 도시권 설정지표 검토

도시간의 연계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통근·통학률을 중심으로 남부경제권의 도시 체계를 분석

- 통근·통학 관련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0% 표본조사자료(통근·통학)를 이용
-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모도시를 기준으로 주변지역과의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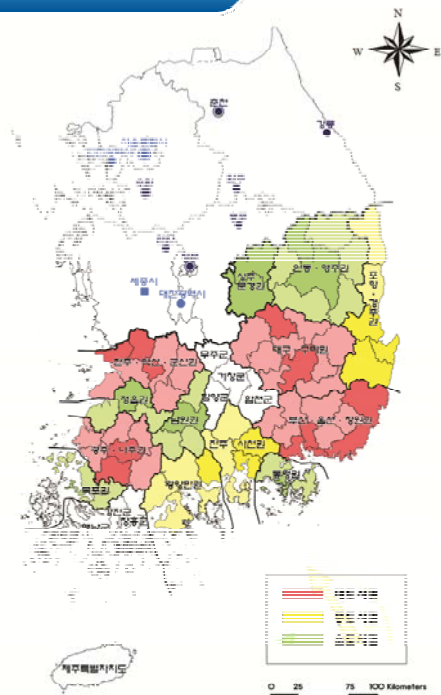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소도시권)

- 소도시권은 인구 10만~3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
 - 안동, 상주, 통영, 정읍, 남원, 목포 등 6개
 - 주요 기능은 성장거점의 역할 및 '자립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과 연계·협력발전을 도모
- 소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규모 10만 명 이하의 소도읍
 - 9개는 별도로 육성(무주, 거창, 함천, 함양,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
 - 각 지역의 향토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확대

도시권	중심도시	배후지역	인구(천명)	면적(k㎡)
소도시권	안동·영주	, , , ,	441	6,899
	통영	, , , ,	412	1,158
	목포	, , , ,	410	1,765
	정읍	, , , ,	189	1,796
	상주·문경	, , , ,	167	2,167
	남원	, , , ,	149	2,277
			1,768	16,062
소도읍	, , , , , , , , , ,		376	6,107
	소계		376	6,107
총계			17,698	53,086

남부경제권의 소도시권 및 소도읍 도시권별 인구(2010)



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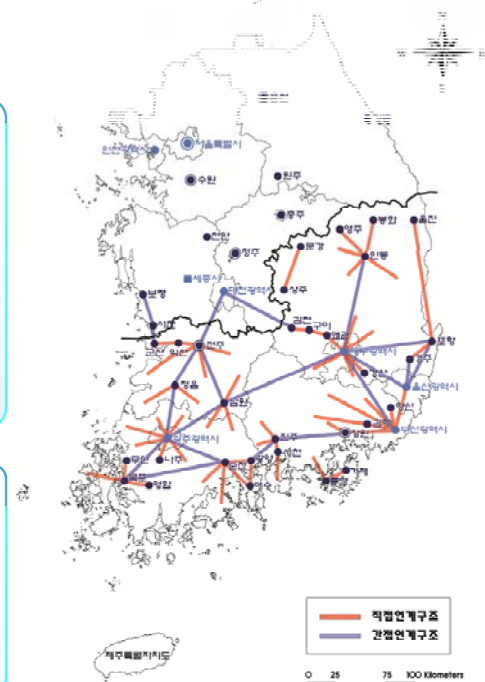
19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4) 다핵도시의 연계 체계

- 도시 간 직접 및 간접 연계구조
 - 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의 도시 간 연계는 직접적인 동일생활권인 동시에 동일경제권
 -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시 간 여객 및 화물통행량 연계 정도와 산업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 간의 간접적 연계 정도를 파악
- 도시 및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 연계·협력사업은 도시 간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대·중·소도시 권 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간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타 도시권과의 협력사업도 2차적으로 고려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 연계체계

20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1 남부경제권 발전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동북아 및 한반도의 연계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경제권의 중추 거점

- 한반도 남부의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토대로 경제체력을 강화하여 환동해 및 환황해경제권 등 동북아의 국지경제권과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경제권의 창출

2) 기본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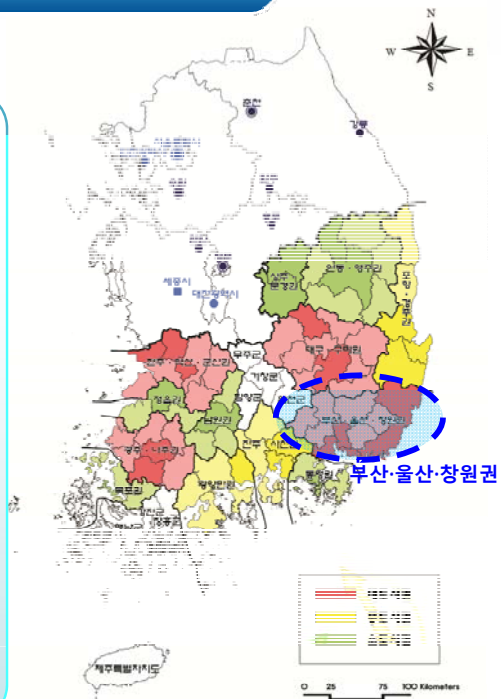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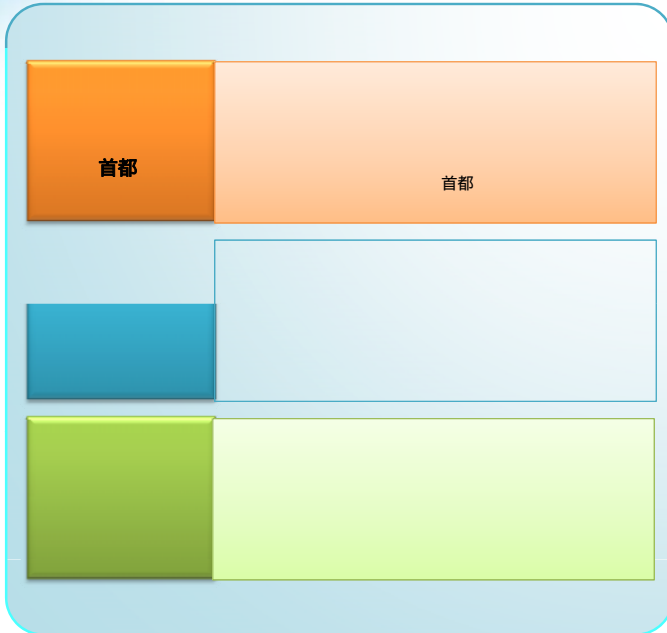




2 대도시권 발전전략1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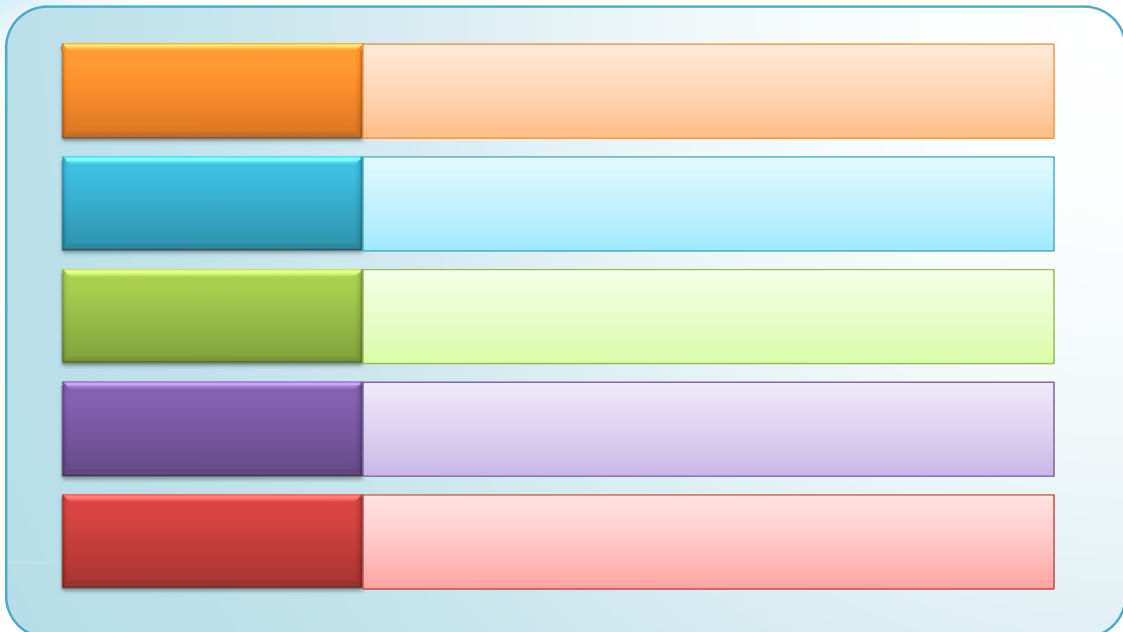
23



2 대도시권 발전전략1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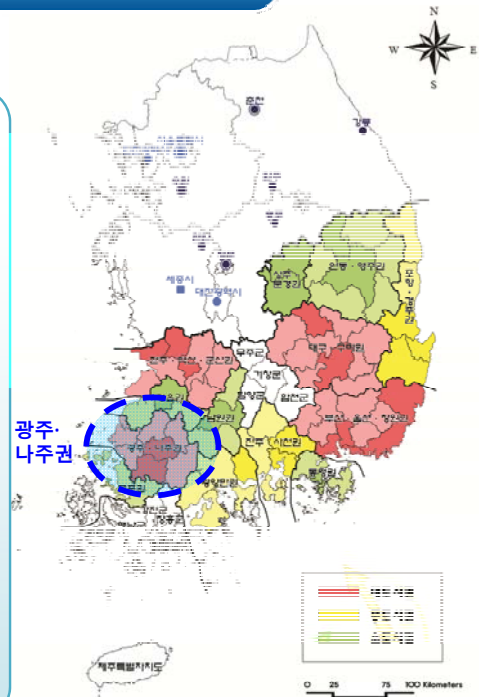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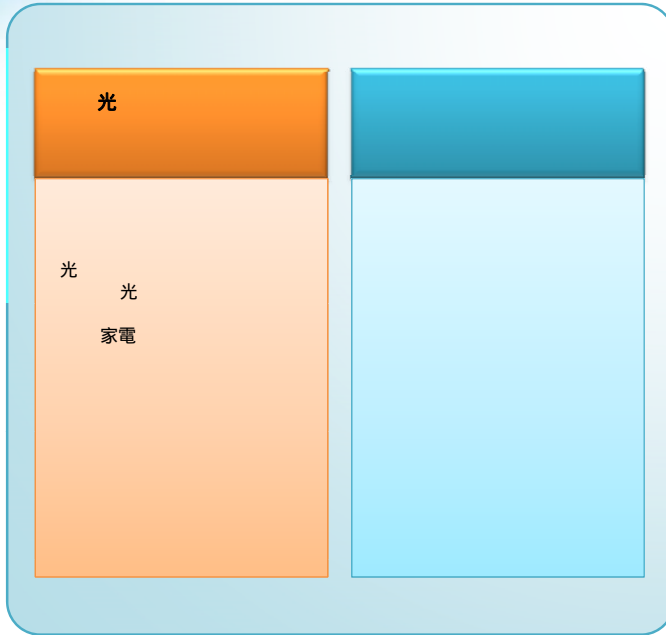


24

2 대도시권 발전전략3

(광주·나주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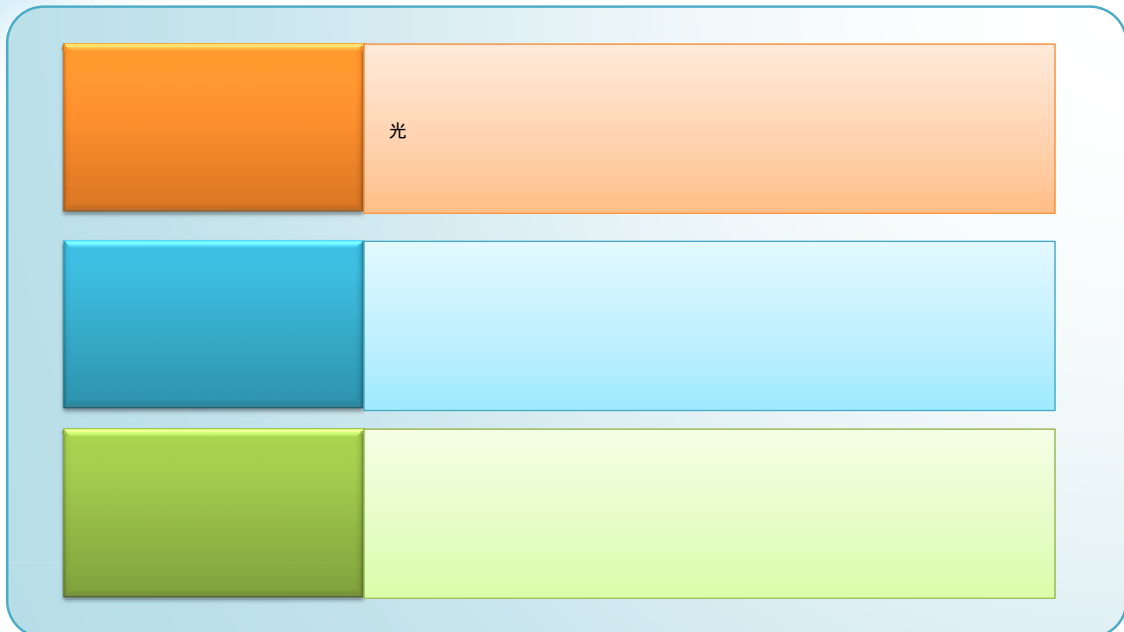
광주·나주 대도시권의 위치

27

2 대도시권 발전전략3

(광주·나주 대도시권)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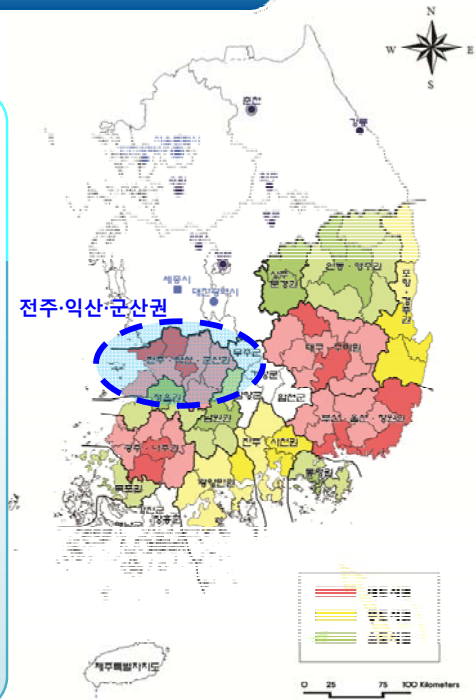
28



2 대도시권 발전전략4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의 위치



2 대도시권 발전전략4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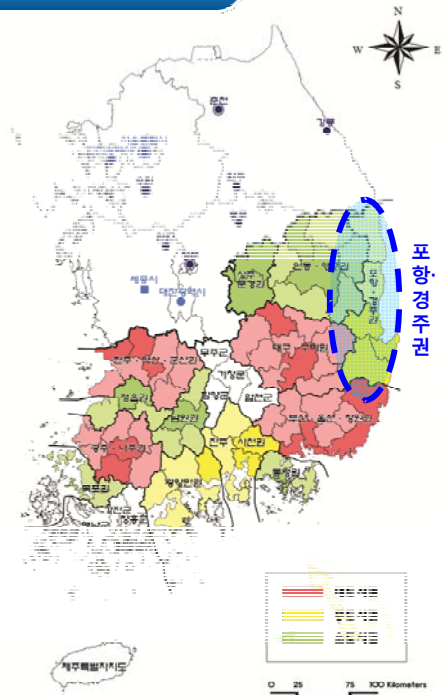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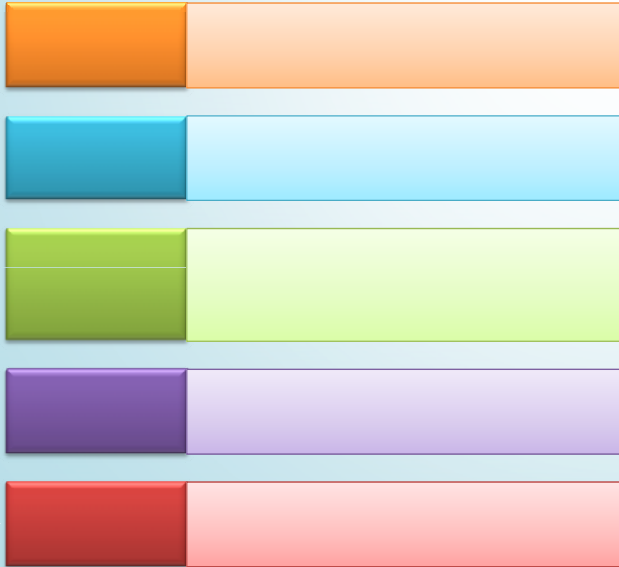
2) 추진전략

	智德園
	防水堤 盛土

3 중도시권 발전전략1

(포항·경주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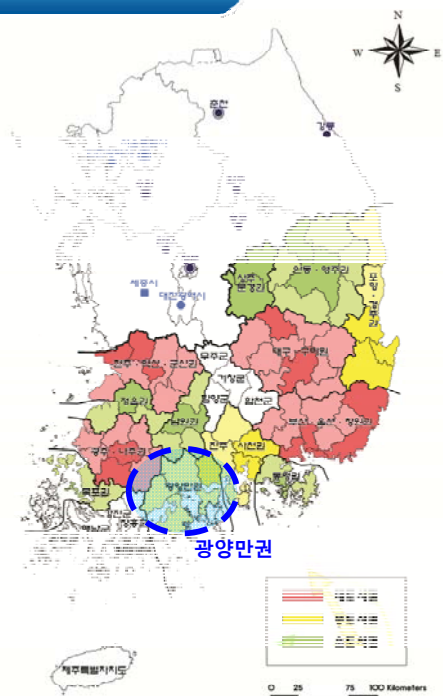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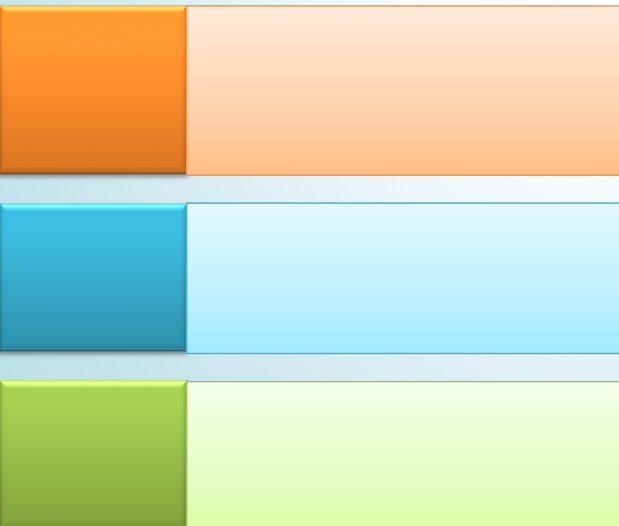
포항·경주 중도시권의 위치

31

3 중도시권 발전전략2

(광양만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광양만 중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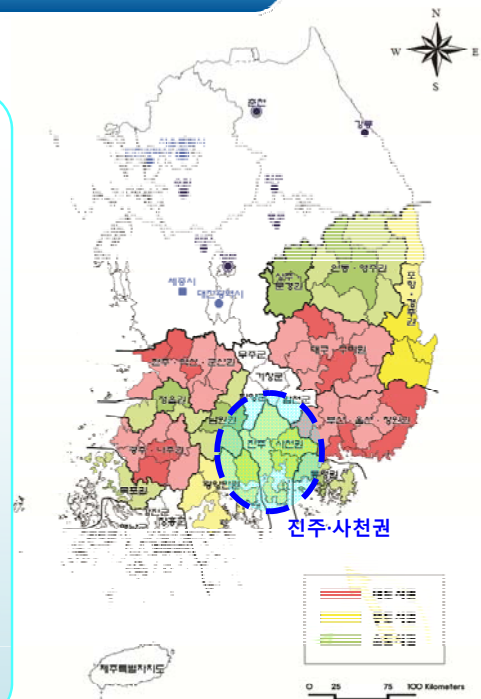
32



3 중도시권 발전전략3

(진주·사천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진주·사천 중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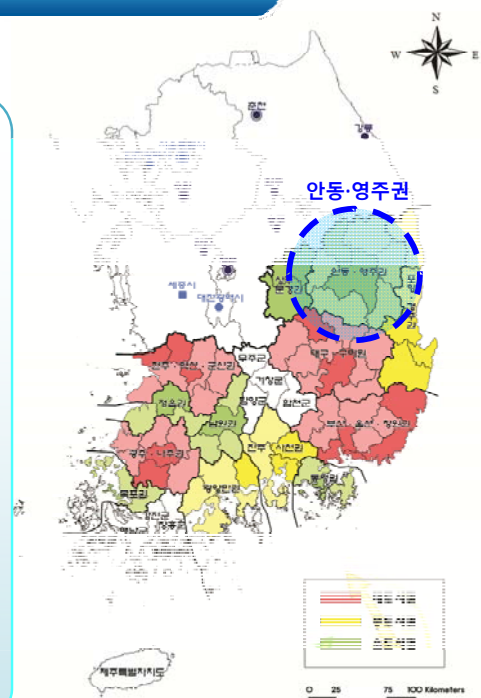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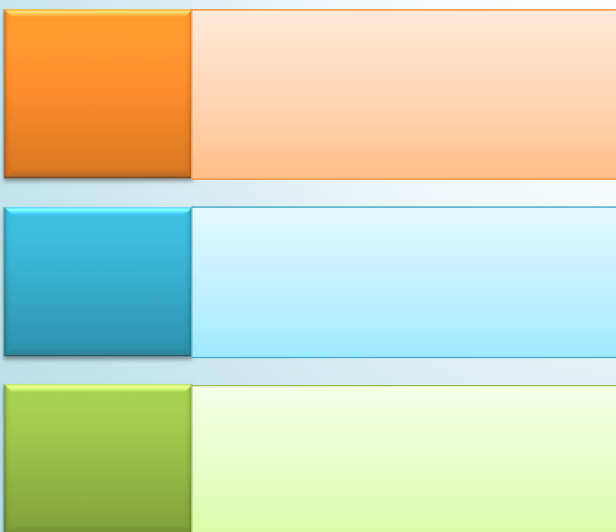
33



4 소도시권 발전전략1

(안동·영주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안동·영주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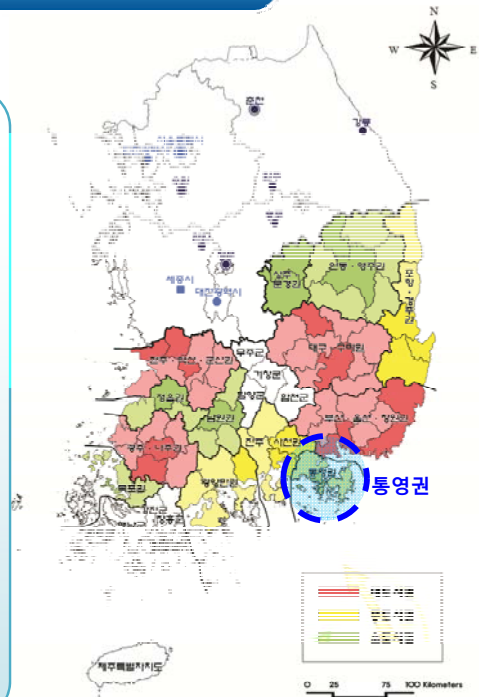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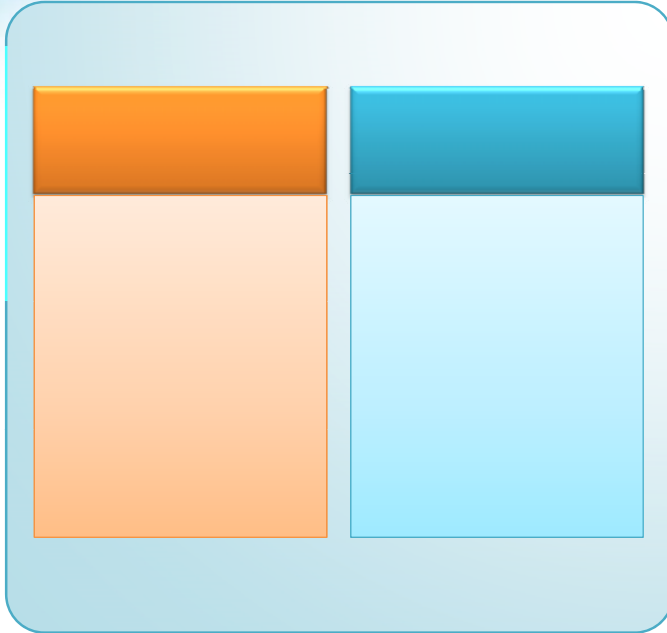
34



4 소도시권 발전전략2

(통영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통영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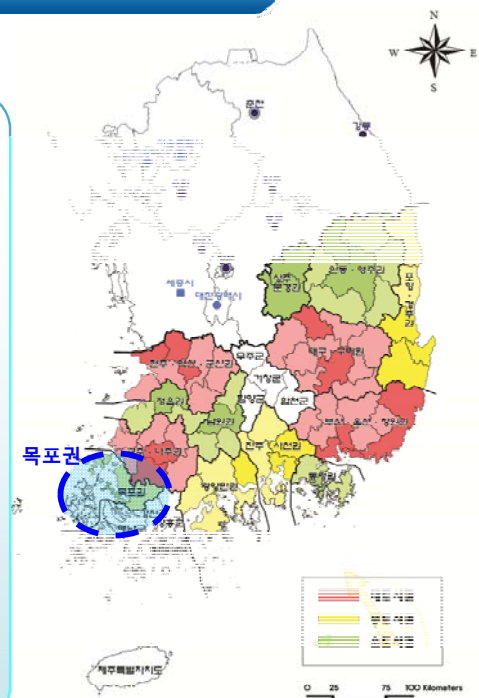
35



4 소도시권 발전전략3

(목포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목포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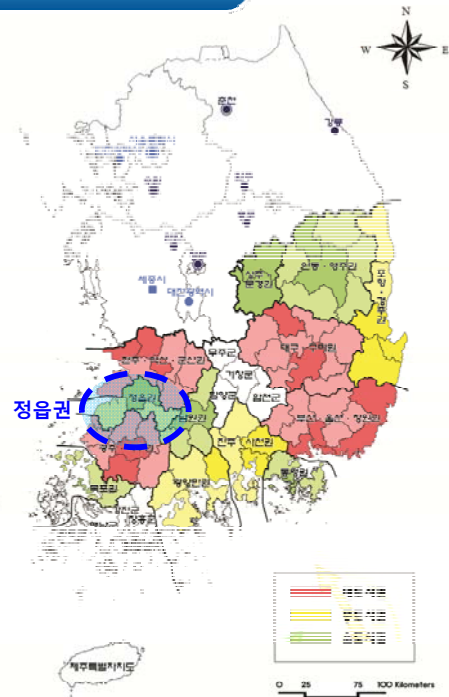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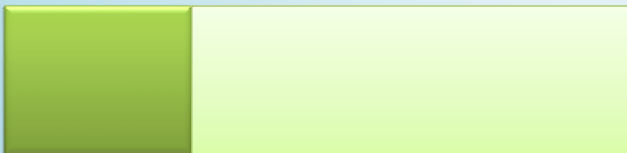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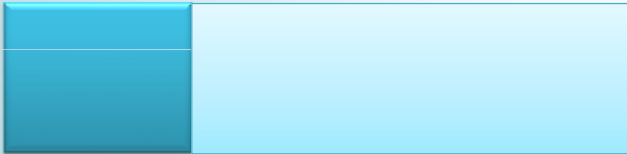
36



4 소도시권 발전전략4

(정읍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정읍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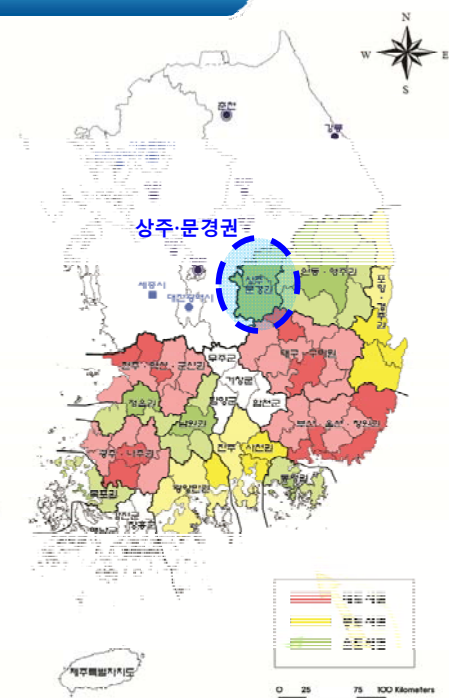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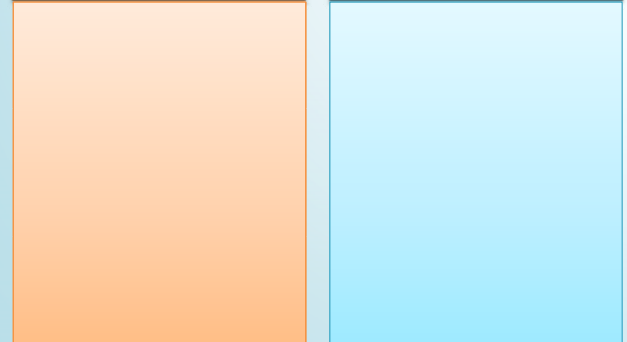
37



4 소도시권 발전전략5

(상주·문경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상주·문경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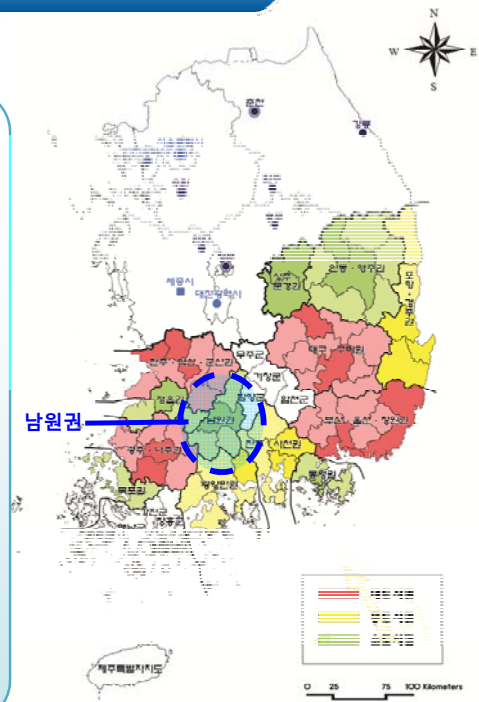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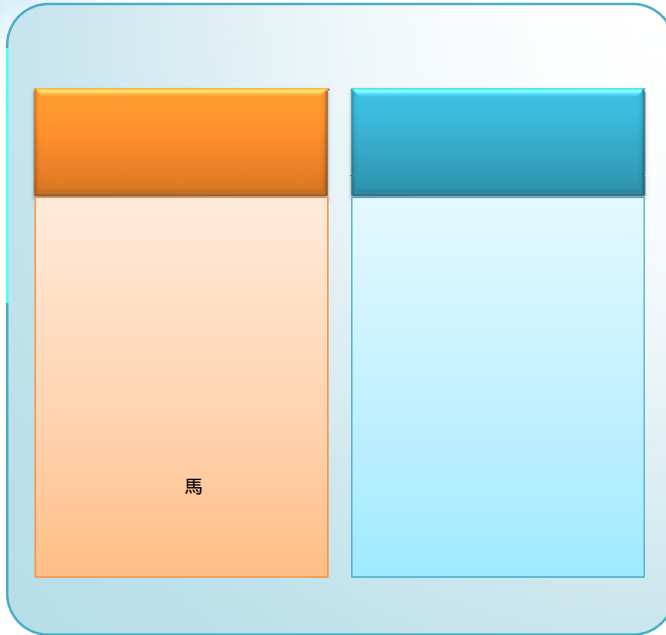
38



4 소도시권 발전전략6

(남원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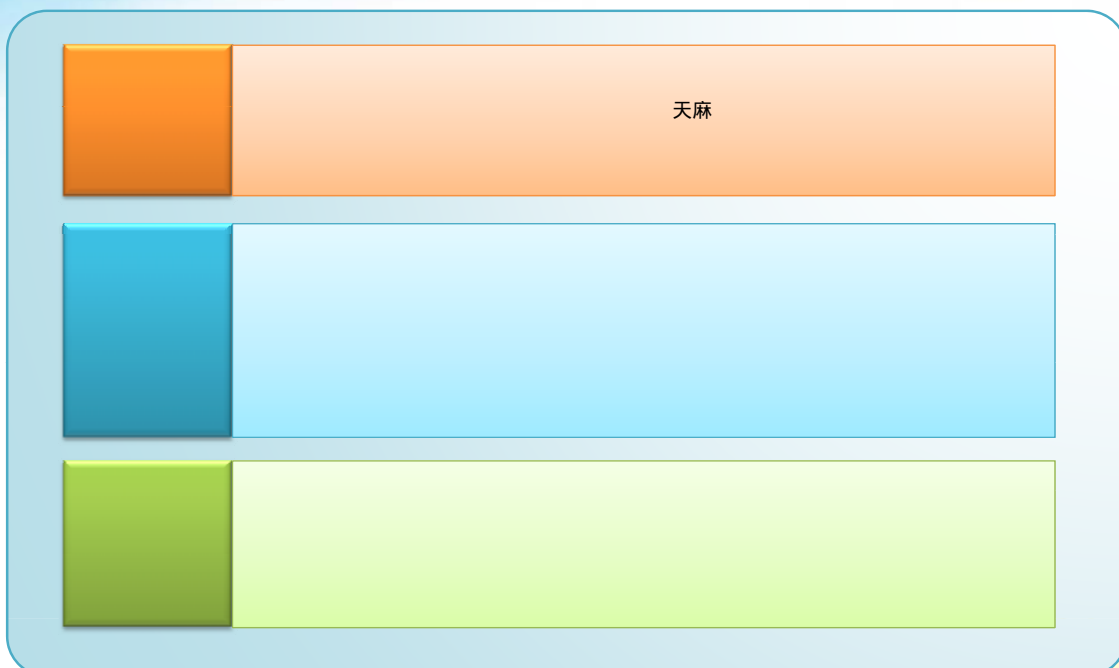


남원 소도시권의 위치

39



5 소도읍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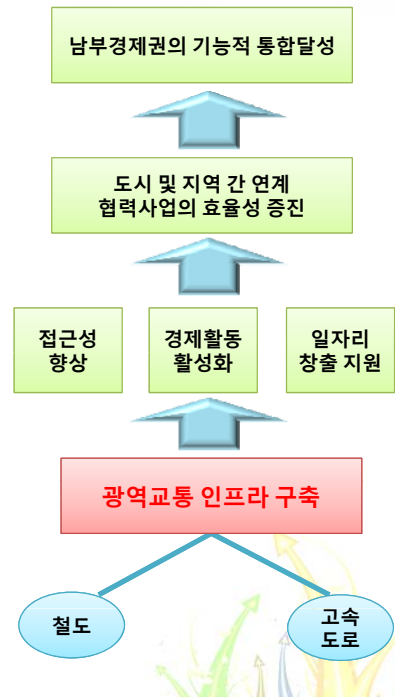
40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

1) 광역교통 인프라의 연계 구축

- ▶ 남부경제권 내의 도시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요 도시 및 경제활동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우선적인 구축을 추진**
- 광주~남원~함양~고령~대구 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 광주 · 나주, 대구 · 구미 및 전주 · 익산 · 군산(남원 경유) 대도시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도모
 - 경전선 철도(삼랑진~진주~순천~보성~광주 송정) 구간 중 순천~보성~화순~광주 송정 구간 : 복선 전철화를 조기에 완공하여 남부지역 도시권 간의 연계 통합을 촉진

- ▶ 도시권 내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부산외곽순환도로 : 조기에 완공하여 부산과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 김천~구미~대구~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광역통근 철도망 : 지역 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지원
 - 새만금 신항~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촉진 시킴으로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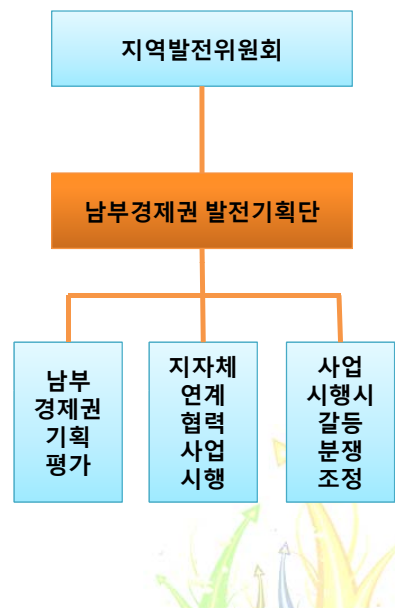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

2) 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 ▶ ‘남부경제권 교통정책본부’ 설립**
- 남부경제권 내의 연계 및 통합을 촉진시키고, 광역교통 인프라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이 필요

- ▶ ‘남부경제권 발전기획단’ 설립**
- 남부경제권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관련 지자체 간의 연계 ·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추진 기구로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기구 설립이 필요
 - 이와 별도로 프랑스의 DIACT(과거의 DATAR를 확대 개편)처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계획계약(Plan Contract)’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한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1 실천방안

1) 광역도시계획체계의 정립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의 의무화

- 대·중·소 도시권별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

계획기간의 조정

-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년으로 규정 → 계획의 신뢰성 저하
-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을 각각 10년과 8년으로 조정하되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각각 5년과 4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 시행계획으로 연결되는 3단계의 계획체계를 정립
- 공간계획체계의 단순화와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

관련 법률의 개정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



1 실천방안

2) 지역 간 연계 · 협력사업의 촉진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정지원

-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협의, 조정, 합의도출, 사업화 등에 긴 절차와 시간 소요 → 사업의 상시적 발굴과 지원이 필요
- 연계 · 협력사업은 ‘광역 · 특화 · 자율 · 협력’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되 선정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계 · 협력사업의 경쟁을 유도
- 연계 · 협력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광특회계에 연계 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지역 연계 협력기금을 설치 · 운영하는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관련부처의 협력 및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행 · 재정적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연계 ·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세출예산 차등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 ·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



1 실천방안

3)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 확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의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특례의 부작용이 적고,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규제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특히 규제특례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 『농지법』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의 효과를 적극 검토

지방정부의 계획고권(計劃高權)과 도시관리의 자율성 확대

- 도시용 토지의 공급과잉과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발허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도시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추진
- 영국은 『분권화 및 지방화에 관한 법률』의 입안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계획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강조



2 정책건의사항

1) 지역개발관련 법령의 통폐합 및 단순화

국토의 난개발 및 過開發 방지

- 현재 각종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은 모두 39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 법률에 의해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 수는 55개, 총 지정면적은 127,808km²로 남한 면적의 1.3배에 달하나 사업지구 면적은 0.4%에 불과하여 국토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초래

관련 법률의 통합정비

- 국토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등을 우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2011. 9)
-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특정산업육성에 관련된 법률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도시개발에 관련된 법률의 통합뿐만 아니라 지경부, 행안부, 농림부, 문체부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도 대폭 통폐합하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건의사항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

선도산업 육성의 성과

-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은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 LED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 왔음
-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해 1단계 사업(2009.7~2011.11)에서는 총 14,401명의 고용창출과 7조2,421억 원의 매출, 33.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

선도산업 육성의 한계

- 문제점은 지원프로그램의 복잡 및 지원대상의 중첩, 산·학·연 협력의 미흡,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 신성장 동력 산업 위주의 지원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선도산업의 육성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산업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동성과 지역산업 육성여건의 약화를 초래

지역산업의 특화 및 일자리 창출

- 시·도별 또는 대·중·소 도시권별로 산업집적도, 특화도,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을 적극 지원
-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도금, 소성가공, 용접 등 제조업기반 뿌리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산업으로 육성
- 고용효과가 매우 큰 의류·봉제, 신발, 인쇄, 귀금속·보석, 안경, 가방, 도자기, 가구, 악기, 점토, 치기공(齒機工) 등의 도시형 숙련집약형 산업의 육성



2 정책건의사항

3) 중앙정부의 차등지원 정책체계 구축

☞ 지방의 고급 일자리 창출

-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지방대학 교수들의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2~3년 연장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 기회를 확대
- 기존 지방기업 및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금융,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 시 지방의무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확대 지원 등이 필요

☞ 저발전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지원 강화

- 소도읍 및 도서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신활력사업' 과 유사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필요
- 각 소도읍 또는 저발전지역의 시·군별로 매년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직접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
- 지자체별로 내발적 발전역량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이 성공한 사례 : 경남 함양군과 전북 완주군 (귀촌·귀농시책을 토대로 인구증가), 경북 봉화군과 경남 산청군(인구 감소추세 완화), 전남 영암군 (활발한 기업유치), 전남 곡성군(기차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증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 참조

